

2023년 연수구 종합감사 결과

2024. 1.



(감 사 관)

2023년도 연수구 종합감사 결과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2023. 10. 23. ~ 11. 3.(10일간)
- 감사범위: 2020. 8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3개반 17명
- 감사중점
 - 기업애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주요 사업 재정·예산의 운영현황 확인·점검
 - 토목·건축 공사의 집행과정과 안전성 점검
 - 청렴 취약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운영실태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분야 운용 실태 등
 - 직전 감사 등의 이행실태, 동일 반복 지적사례 등

2. 감사결과

- 처분요구 총괄 ※ 처분요구 내역 집계

(단위: 건, 천원,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기관 경고
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계	회수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79	29	47	3	219,386	216,503	2,883	18	1	17	5

○ 처분요구 내역

(단위: 천원, 명)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01	계 약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고 등 소홀	○단 외 12개 부서	주의	-	-	-	
02	계 약	건설산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기 미준수	●과 외 3개 부서	주의	-	-	-	
03	계 약	공사목적물의 하자 업무 처리 미흡	●과	주의	-	-	-	
04	계 약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관리 소홀	●과	-	-	-	기관 경고	
05	인 사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처리 부적정	◇과	시정	회수 74,020	징계1 훈계2	-	
06	인 사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업무 부적정	◇과	주의	-	훈계2	-	
07	지 방 세	취득세(상업용·주택용) 부과 관리 부적정	□과, ■과	시정	추징 39,154	-	-	
08	지 방 세	재산세(건축물 구조)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62,770	훈계1	-	
09	지 방 세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과	시정	추징 7,712	-	-	
10	세외수입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 외 3개 부서	시정	추징 17,180	-	-	
11	세외수입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납금 납입 업무 소홀	≡동 외 6개 부서	주의	-	-	-	
12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과	주의	-	훈계2	-	
13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급여 관리 소홀	▢과	시정	회수 2,367 추급 2,883	-	-	
14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소홀	◁과 외 2개 부서	시정	회수 2,037	-	-	
15	사회복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과	시정	-	-	-	
16	체 육	○○동 ***번지 사용 및 관리운영 부적정	♠과	-	-	-	기관 경고	
17	문 화	미술품 보관 및 관리 부적정	♠과	시정	-	-	기관 경고	
18	문 화	●●센터 사무 위탁 및 관리 업무 소홀	♠과	시정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19	문 화	노래연습장업 교육위탁 및 관리 업무 소홀	♠과	시정 주의	-	-	-	
20	교 육	연수구 ☒☒센터 및 ☒☒센터 민간위탁 운영 소홀	☒과	주의	-	-	-	
21	문 화	문화재 관리 업무 소홀	♠과	주의	-	-	-	
22	체 육	연수구청 △△선수단 운영 소홀	♠과	시정	-	-	-	
23	위 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	-	-	
24	위 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소홀	㉠과	주의	-	-	-	
25	위 생	축산물 위생검사검검 및 위생교육 관리 소홀	●과	시정	-	훈계3	-	
26	보 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과	주의	-	-	-	
27	보 건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	㉡과	주의	-	-	-	
28	보 건	마취약 및 산성·알칼리성 약품 폐기 소홀	㉢과	시정	회수 506	-	-	
29	예 산	국제회의 행사관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관리 부적정	■과	-	-	-	기관 경고	
30	예 산	사회취약계층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관리 운영 부적정	■과	주의	-	-	기관 경고	
31	계 약	하도급공사 계약 및 관리 부실	■과, ●과	통보 주의	-	-	-	
32	계 약	특색등 설치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계약 부적정	■과	주의	-	-	-	
33	계 약	☆☆시스템 관급자재 구매 계약예규 미준수	■과	주의	-	-	-	
34	물 품	연수구▲▲에 차량 직접 지원 부적절	♠과	시정	-	-	-	
35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미흡	●과	개선	-	-	-	
36	공유재산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처리 미흡	♠외 2개 부서	시정	-	-	-	
37	공유재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	■과	주의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38	회 계	공공예금계좌 관리 소홀	☐과 외 2개 부서	시정	-	-	-	
39	계 약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업무 소홀	☐과 외 4개 부서	주의	-	-	-	
40	계 약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과	주의	-	-	-	
41	계 약	용역 및 물품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실, ●과	주의	-	훈계1	-	
42	계 약	조달업무 처리 소홀	☞과	주의	-	-	-	
43	계 약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개정 미추진	●과	개선	-	-	-	
44	계 약	재공고입찰 운영 소홀	●과	주의	-	-	-	
45	계 약	경쟁입찰 대상사업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과	주의	-	훈계2	-	
46	계 약	용역 발주 시 실적인정 소홀	㉡과, ☐과	주의	-	-	-	
47	계 약	⇄용역 계약업무 처리 소홀	㉡과	주의	-	-	-	
48	보 상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소홀	☞과	주의	-	-	-	
49	기 금	기금 운영 관리 소홀	㉢과, ❖과	주의	-	-	-	
5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과외 5개 부서	주의	-	-	-	
51	토 목	공사기간 산정 심의 절차 소홀	●과	주의	-	-	-	
52	도시계획	설계공모시 도시관리계획 적합성 검토 소홀	㉣실	주의	-	-	-	
53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과	시정	-	-	-	
54	토 목	도로점용 관리 업무 소홀	☐과, ❖과	시정 주의	추징 3,170	-	-	
55	건 설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과, ☞과	시정 주의	회수 5,837	-	-	
56	건 설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소홀	◇과 외 2개 부서	주의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57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측량 절차 이행 소홀	※실 외 2개 부서	주의	-	-	-	
58	교 통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관련 조례 정비 소홀	☞과	시정	-	-	-	
59	자원순환	폐기물처리업 관리 부적정	☉과	시정	-	훈계3	-	
60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관리 소홀	☉과	시정	추징 1,750	훈계1	-	
61	자원순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소홀	☉과	시정	-	-	-	
62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 관리 소홀	▲과	주의	-	-	-	
63	환 경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과	주의	-	-	-	
64	지 적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업무소홀	☼과	시정	-	-	-	
65	건 축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 소홀	✎과	시정	-	-	-	
66	건 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과	시정	-	-	-	
67	건 축	건축공사 설계용역 감독 업무 소홀	☺과	주의	-	-	-	
68	건 축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확인 소홀	✎과	주의	-	-	-	
69	공 원	공원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과	시정	-	-	-	
70	공원녹지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과, ✎과	주의	-	-	-	
71	산 림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업무 처리 소홀	▲과	주의	-	-	-	
72	조 경	조경석 반입에 따른 사전 승인 및 검수 소홀	▲과	주의	-	-	-	
73	교 통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과	주의	-	-	-	
74	교 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행정처분 소홀	✎과	주의	-	-	-	
75	교 통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과	주의	-	-	-	

연번	분 야	지 적 사 항	관 련 부 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기관	
76	교 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과	시정	-	-	-	
77	지역경제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청문절차 미준수	●과	주의	-	-	-	
78	공 사	물품구매 계약 등 업무처리 소홀	■과, ◆과	주의	-	-	-	

3. 처분요구서

※ 명세 별첨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고 등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 단 외 12개 부서

내 용

공공 건설공사¹⁾ 발주시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시에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시행 2021.9.17.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9.8. 제정)」(이하 고시)을 근거로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²⁾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1. 공공 건설공사 설계용역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미반영

발주청은 고시 제4조(공사기간³⁾의 결정 절차) 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시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청에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고시 시행일(20**.*.*)부터 20**.*.까지 발주한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살펴본 결과, 총 **건의 건설공사 설계용역 중 **건의 건설공사 설계용역시 공사기간 산정 관련 과업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용역 준공시 공사기간 산출 근거 등이 성과품으로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었다.

2. 공공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미 명시

발주청은 고시 제4조(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공사기간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시·군·구는 5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고시 제5조(공사기간 산정 등의 명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고시 시행일(20**.*.*)부터 20**.*.까지 입찰에 부친 공공 건설공사 총 ***건 중 ***건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지 않았다.

3)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건설공사 발주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입찰시
명시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산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기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 부서

내 용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⁴⁾(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8.17. 개정, 20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 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다.

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미만 공사를 말하며,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등은 제외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 **.부터 20**.*.까지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의무대상 총 **건 중 사업부서 착공일 이후 계약 의뢰 * 건, 계약부서 계약 체결 지연 *건으로 총 **건에 대하여 착공일로부터 최소 *일~최대 ***일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지연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체결하여, 지연 체결로 인한 건설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목적물의 하자 업무 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계약의 담보 책임)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하자보수이행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해당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착오 적용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제1항에 의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 이내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1항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년 *월부터 현재까지 총 ***건의 하자보증 건 중 *건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기간을,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착오 적용하였다.

2. 하자담보 책임 존속기간 시작일 지정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 책임)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적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시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 ***건 중 **건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시작일을 검사한 날로부터 정하지 않았다.

3. 정기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 책임) 제3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년 *월부터 현재까지 정기하자 검사 대상 총 ***건 중 20**년 하반기 정기하자 검사시 *건, 20**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시 ***건, 20**년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시 ***건, 20**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시 ***건, 20**년 하반기 정기하자검사시 ***건, 20**년 상반기 정기하자 검사시 ***건의 검사를 누락하였다.

4. 최종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르면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2.7.11.][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2023. 6. 29., 일부개정](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지체없이 따로 검사하여야 한다.

지방계약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최종검사대상 총 ***건중 ***건에 대해서는 최종검사를 미 실시 하였고, **건에 대해서는 최종검사 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하였으며, 최종검사를 실시한 ***건중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미발급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로 공사목적물에 대한 하자업무 처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시어, 향후 하자발생시 적절한 하자담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

제 목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시행 2023.9.28.][이하 행정업무규정] 8조(문서의 기안)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업무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의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 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행정업무 규정 제5조(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에 따라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 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업무 규정 제 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행정업무 규정 제 10조(문서의 결재)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중 ●과 9. 공사도급 용역 및 물품의 계약 항목을 보면, 계약 체결, 선금 지급, 설계변경, 공사 용역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련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기안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상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 *.부터 20**. *.까지 계약 체결 사무 ****건, 변경계약 체결 사무 ****건, 선금 지급 사무 ***건, 총 ****건에 대하여 문서의 기안 및 결재를 생략한 채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기관경고] 계약사무 처리시, 문서의 기안 및 결재를 생략하여 결정권한이 없는 자가 의사결정을 한 사항으로 기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여 경고하오니,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징 계·훈 계·시 정 요구

제 목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자 승진 임용

지방행정○○(現 지방행정●●●) A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現 지방행정◇◇◇) B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 C는 20**. *. *.부터 20**. *. **.까지 연수구 ◇에서 교육훈련 실적 점검 및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운영) 등 업무를 담당,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가. 업무개요

연수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반영하고 있으며, 20**. *월부터 20**. *월까지 총 **회의 승진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에 따르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 심사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로 관리하되,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법정 의무교육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일 연도 내 동일 과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부서는 교육훈련실적을 오류 및 부정 입력한 경우 즉시 입력 내용을 삭제하고 부정 입력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소속 공무원 대한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여야 하고, 동일직급에서 3년 이내에 동일과정을 중복으로 이수한 실적 또는 중복 입력한 실적 등을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적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 심사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연수구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미흡하게 처리하여 D가 3년 이내에 이수한 동일과정 교육훈련 실적(이하 “중복이수 교육실적”이라 한다)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중복이수 교육실적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20**. *. **.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인 D가 승진대상자로 의결되어 20**. *. **.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① A의 경우

A는 연수구 교육훈련 업무담당자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또는 정기적인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중복이수 교육실적을 삭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 *. **. 승진심사 시 D가 중복으로 이수한 교육 실적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 등 관리에 미흡하였다.

그 결과 승진심사 시 위 D의 중복이수 교육실적이 반영되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되었고, 중복이수 교육 실적을 삭제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자로 해당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D가 승진자로 의결되어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A의 행위는 연수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행위로

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징계)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B, C의 경우

B와 C는 각각 교육훈련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교육훈련 담당자 A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20**, *. **, 승진심사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위 D를 승진 임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

라.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연수구는 중복이수 교육실적을 삭제하지 못하는 등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훈련 실적 점검에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교육훈련 담당자가 총 **회의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개인 차원에서의 교육실적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등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 및 교육담당자가 교차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승진심사 대상자의 교육실적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A)

A는 20**, **, **, 실시한 문답조사에서 감사 결과만을 보면 중복교육 확

인이 안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실적 점검을 실시하였고,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직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등 업무 추진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관계기관 등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교육훈련 이수시간 승진 임용 반영 제도’는 법령상 의무 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심사에 있어서 심사 대상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충족 여부 확인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써 교육훈련 업무담당자는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업무담당자 A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당 업무 추진에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승진심사 대상자가 중복으로 이수한 교육실적을 삭제하지 아니하는 등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관리를 미흡하게 처리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미충족으로 승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대상자를 승진 임용되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연수구는 20**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지적받았으며, A는 당시 연수구 교육훈련업무 실무담당자로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된다.

2.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 교육훈련 여비 지급

가. 업무개요

연수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4조(교육여비의 지급)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년~20**년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여비를 지급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VII.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에 따르면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육훈련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근무지내 출장시의 교육훈련 여비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8조를, 교육훈련 여비의 조정, 교육훈련 여비지급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제29조 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는 20**. **. **.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소요되지 않은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증빙서류 등이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환수조치 하라’는 내용의 ‘비대면 교육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연수구 교육훈련 담당부서는 같은 날 이 공문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

에게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증빙서류 등 없이 지급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계사실

연수구는 20**년, 20**년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으로 선발된 공무원 총 ***명에게 비대면 화상교육에 통신비 등이 소요되고, 일비 및 식비는 교육훈련 운영지침 기준표 상 정액지급으로 증빙서류가 불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증빙서류 등 없이 일비, 식비 등 교육훈련여비 총 74,020천원을 지급하였고,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비대면 교육(재택교육) 대상자에게 일비, 식비 등 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20**년, 20**년 비대면 교육대상자에게 증빙서류 등 없이 기 지급한 교육훈련 여비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관계기관 의견

연수구는 비대면교육 여비 지급에 대한 별도의 방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요되지 않은 비용’을 판단하는 데에 담당자마다 지침 해석에 혼선이 있었으며 향후 비대면 화상교육 대상자에게 ‘소요되지 않은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증빙자료가 있을 시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징계]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점검을 미흡하게 처리하여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승진 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위 A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교육훈련 업무 실무책임자 및 감독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승진 임용되게 한 책임이 있는 위 B와 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비대면 교육 대상자에게 증빙서류 등 없이 지급된 교육훈련 여비 74,020천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연수구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4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임용시험을 실시하여 20**. *. **. 사서 분야에 E, F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으로, 20**. *. **. xxx지원관 분야에 G를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으로 각각 임용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1차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것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 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경력 등이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자격기준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등 공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면접심사대상자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사실

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급 사서 채용 부적정

연수구는 ■■■에서 근무할 사서를 채용하고자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공고한 후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E, F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E의 경우 사서 자격증 취득일이 20**. *. *.로 준사서 이상으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실무 경력이 면접심사일 기준 *개월 *일로 공고에 따른 *년에 미달됨에도

위 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위 E를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연수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검토 없이 20**. *. *.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E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20**.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으로 최종 임용하였다.

그 결과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어야 할 대상자인 E가 최종 합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급 xxx지원관 채용 부적정

연수구는 xxx 관련 정책의제 발굴, 지원 등 민관xxx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 *. **. 응시자격을 공고한 후 20**. *. *. 연수구 ▽과 ◆담당 H와 연수구 ◇과 ■담당 I를 심사위원으로 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였고, G 등 3명을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용시험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G의 경우 전문학사 취득자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년 *개월로 공고에서 정한 *년에 미달됨에도 위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은 G를 학사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여 면접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연수구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검토 없이 20**. *. **.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G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20**. *. **.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으로 최종 임용하였다.

그 결과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어야 할 대상자인 G가 최종 합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지방행정▼▼(現 지방행정☆☆) J는 20**. *. *.부터 20**. *. **.까지, 지방행정★★ K는 20**. *. **.부터 **까지 연수구 ◇과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위 사람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시험 서류전형 시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응시자가 제출한 자격·경력 등이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심사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면접대상자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 중 J는 20**년 제*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K는 20**년 제*회 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심사위원들이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면접대상자로 결정하였음에도 재확인 요청 등 조치 없이 면접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임용시험에서 각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최종 합격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J와 K는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4. 관계기관 의견

연수구는 해당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세부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바가 있으나, 여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차후 진행될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훈계]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위 J와 K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취득세(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제1호에 따라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르면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 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동 **번지 ***호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 17,005,44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차량 취득세 감면 관리 부적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득세 과세물건을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차량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대 차량의 취득세 등 22,148,98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 39,154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재산세(건축물 구조)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 납세지에 소재하는 부동산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21조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당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야 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

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표준액에 해당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재산세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등으로 구조지수를 적용 산정하여 부과해야 함에도 ○○동 *-**번지 등 *개소의 *명 재산세 등 62,770,060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훈계] 건축물 구조 관련 재산세 등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위 대상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과세 누락된 건축물 구조에 대하여 재산세 등 62,77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과세기준 일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를 세율로 적용하며,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1

년도분부터 사업소분의 세액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건, 7,712,46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과세 누락된 사업소분 주민세 등에 대하여 7,712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3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함께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전통지한 감경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감경되

기 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연수구 □과 등 4개 부서에서는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어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명, 과태료 17,180,000원을 미부과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본 부과되지 아니한 과태료 17,180천 원을 조속히 부과·징수하시고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납금 납입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冊동 외 6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지방회계법」·「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세외수입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납금에 대하여 납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판단기준(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구에 납부하

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은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관계사실

그러나 연수구 Ⅲ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 부서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말까지 인증기용 수입증지를 현금, 신용카드, 계좌 등으로 수납한 경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총 수입금 ***건, 87,010,220 원에 대하여 지연 납입 처리하여 수입증지 납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납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지연 납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 I. 수급자 신청 - '4. 신청절차 (라. 신청접수), 8. 급여종류별 새울 민원접수 및 등록'에 따라 읍·면·동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문서를 받아 시스템에 신청등록하고, 군·구에서는 교육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새울민원접수 및 등록 등 민원 처리를 군수·구청장이 처리해야 함을 숙지하고, 신청서류를 즉시 접수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민원 신청을 받은 행정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는바, 만일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보완요구와는 별개로, 접수 받은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급여신청일의 자동 부여는 물론, 서울민원 행정시스템에 급여 종류별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 되도록 해야 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적법하게 처리해야 함을 상기하여야 한다.

또한, 군·구의 통합조사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접수 즉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바,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등 조사 대상 확인 단계를 거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자료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된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신청인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자료등록 후 수정 결과를 적용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접수된 민원 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여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통지해야 하되,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권자가 군·구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시작되며,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된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신청 관련 서류를 받은 읍·면·동에서는 서류를 제출받은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를 입력·등록한 후, 군·구 통합조사팀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하며, 군·구 통합조사팀에서는 이송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서류의 신속한 배분·접수 처리는 물론, 관련기관으로의 금융재산을 포함한 공적 자료, 주택조사 요청 및 회신 결과 반영, 생활실태조사, 조사 결과 처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지체 없이 수행하여 최저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급여가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사 업무를 철저히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연수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관련 서울민원행정시스템의 민원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청·접수·책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서 접수, 자료조사 요청’ 등 조사절차 이행을 지연 처리함에 따라, 생계 곤란 등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조속히 제공되어야 할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뒤늦게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소홀 관련 처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신청 서류를 신청 등록 즉시 구 통합조사팀으로 이송해야 하나, *일~***일이 경과 되는 시점에 관련 서류를 이송함에 따라 신청조사의 시작 시점이 지연되었으며,

연수구 ☐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신청조사가 법정 처리 기한 내 조사 결정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송된 서류를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으로의 공적 자료 및 금융재산, 주택조사를 적기에 요청해야 함에도, **명의 신청 서류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일이 경과 된 시점에서야 접수처리 하였으며, 공적 자료(금융 포함)의 경우 최대 **일(**건), 주택조사는 최대 **일(**건) 경과 되는 시점에 관련기관으로의 자료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조회요청이 지연되는 만큼 생계 곤란 저소득가구의 급여 결정 시기 또한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의 조사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기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할 수 있음을 제외하고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해야 함에도,

연수구 ☐과에서는 급여신청자 **명에 대하여 ‘새울 민원행정시스템 - 민원처리 - 민원진행상황처리 - 처리기한연장’ 메뉴에서 민원처리기한을 *회 또는 *회씩 연장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처리기한 연장사유를 확인한 결과, 연장요구일 이전에 이미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자료회신이 완료(**건)되었거나, 조사담당자가 관련기관으로의 자료조회를 뒤늦게 요청하여 회신이 지연된 사항임에도, 새울시스템 상 실제 조사지연 사유와 다르게 ‘기관(부서)회신지연’으로 연장 사유를 등록하는 등 부적정하게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신청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울민원행정시스템 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실제 조사결정일과 민원 완료 처리일이 일치되도록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명확히 등록 처리해야 하나, 새울민원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급여신청자 **명의 결과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명에 대한 신청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사 결정 되기 최소 *일에서 최대 ***일 전,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조사 결정된 것으로 ‘민원 처리 완료’로 입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전산에 등록처리 하였고, 이들 중 **명의 경우에는 보장결정일과 민원 처리 기한을 비교·확인한 결과, 민원 처리기한일로부터 짧게는 *일에서 최장 ***일이 초과된 시점에서야 보장결정되었다.

위와 같이 연수구 ☐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접수·조사 등 절차를 지연 추진함에 따라, 급여 신청자 **명의 수급자 선정이 신청일로부터 **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적시에 지원되어야 할 생계 등 급여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이들 중 **명은 생계(주거)급여와 동시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대상자로,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생계(주거)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급여 선정일’에 개시되는 만큼 의료급여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절차를 수행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의료급여 개시 시점이 지체되어 생활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질병·부상 치료지원을 위한 진찰·검사,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입원, 간호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 또한 늦춰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가 이행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급여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사회보장급여 지급업무 소홀

가. 판단기준(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급여 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급여 신청일’을 ‘급여 개시일’로 하여 신청 월부터의 급여를 소급 지급하되,

급여자료 생성일인 매월 15일 이후에 보장 결정되어 월말에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해야 하고, 급여 지급에 앞서 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급여자료 내역의 누락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지급 확정된 후,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회계부서로의 의뢰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는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되,

만일 생계급여 신청자가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수급 신청자의 연금 수령액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가구의 실제 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자가 생계 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여 「긴급복지지원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동시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 생계급여 결정전까지 우선적으로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해야 하며,

추후 생계급여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는 기초 생계급여와 우선 지원된 긴급 생계지원비를 비교하여, 해당 월의 긴급 생계지원액이 기초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분의 생계급여가 추가 지급되도록 해야 하고,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법령·지침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군·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군·구에서는 이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군·구에서는 급여의 지급확정 및 지급의뢰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급여자료 내역이 누락되거나 잘못 산정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해당급여가 적기에 착오 없이 지급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관계사실

연수구 기초 생계급여와 긴급 생계지원·기초연금 동시 신청자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명의 급여가 기초 및 긴급 생계 지원 동시 신청자 중 신청 월 급여 미지급, 소득인정액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해

과소(**천원~***천원) 지급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 지원이 저해되었으며, 수급자 *명의 급여는 산출 오류 등으로 과다(***천원~***천원) 지급되어 착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소홀

가. 판단기준(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입원 중인 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지체 진단받은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정신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등록장애인, 치매 노인, 유소년 단독가구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해 민법상 후원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토록 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급여관리자 지정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자부, 사위, 계부모 포함),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만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당한 급여 사용 우려로 급여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생활 실태 파악 및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며, 지정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당 사용·관리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고지 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 관리 사실 및 책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중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시달하고, 읍·면·동장은 군·구에서 시달된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토대로 반기별 혹은 연 1회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 보고(반기별 점검 : 매년 7월 15일, 다음연도 1월 15일 / 연1회 점검 : 다음연도 1월 15일 한) 하며,

만일 급여관리자가 수급자의 급여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군수·구청장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장은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 점검 시, 타인에 의해 수급자의 복지급여가 수급자와 무관한 타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입출금 내역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상의 공통 점검항목(통장소유자, 인출형태,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주요 사용처, 타인사용 입출금 내역, 수급자를 위한 정기적금, 펀드, 보험가입여부)과 병원 수급자의 경우 간식비 사용에 대한 미납 여부 등 별도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점검한 후, 수급자 및 급여 관리자의 인적사항, 세부 항목별 점검사항, 조사일, 조사자(업무 담당자), 확인자(읍면동장)의 서명날인이 된 점검표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 관리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 「급여관리 점검계획」을 수립, 읍·면·동에 통보한 후, 읍·면·동에서 통보되는 점검계획에 따라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고된 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 급여관리자가 수급자의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수급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나. 관계사실

연수구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반기별 급여 관리 점검표 및 복지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지출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급여 지출은 수급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유로 현금지출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자동이체·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통장 기재 내용만으로 지출 내역 점검이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지출내역 기록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 급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급여관리자가 제출한 급여통장의 입출금 거래 내역 상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인출, CD 송금에 대한 지출경위 및 세부 지출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거나, 인출액 대비 증빙서류 제출이 미비함에도 인출내역과 일치한 입증자료 제출 등 명확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L의 급여관리자인 M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를 수급자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월~**.*월, 총 ***,***원)하고 있었고, Σ동에서는 **. 급여관리 점검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급여통장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지만,

수급자와 무관한 용도로 급여관리자가 부적정하게 지출한 관리비 등 ***,***원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매월 수령하고 있는 생계급여(**만원)보다 병원비(**만원) 지출이 크다는 이유로, 반환을 받지 않았다.

또한, 수급자 N, O의 경우에는 반기별 점검 시작 전, 직전 급여관리 점검 시 확인된 최종 통장 잔액과 통장 거래일로부터 연이어 점검하지 아니하고, 급여관리자가 임의로 제출한 통장거래일과 통장 잔액으로부터 차기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미확인된 통장 거래기간 중 해당통장으로 입금된 복지급여와 입금전 통장 잔액의 일부가 인출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병원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납 일자, 수납액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입·퇴원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간식비 수납 대장을 제출받아 급여통장 인출 규모와 본인 부담 의료비(간식비 포함) 실 납부 금액의 일치 여부, 미납금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나,

진료비 실제 납부내역이 아닌, 고지용 입·퇴원 영수증만을 제출하여 수납일과 수납액 확인이 불가하고, 간식비 내역서의 경우에도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음을 입증할 의료기관 직인 날인과 간식비 입금일자별 입금액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보완 등 시정을 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급여관리 점검표’ 기록관리에 있어서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수급자 임에도, 병원수급자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기록이 없거나, 점검표상 급여관리 점검일자 미기재 등 점검표의 기록관리 또한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증빙자료 없는 현금인출, 인출액 대비 증빙자료 미비, 급여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 누락 등 급여관리 점검의 부적정 처리 내역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작성·제출된 ‘급여관리 점검표’ 상에는 지출내역 및 영수증 일치여부 점검 결과 ‘양호’, 타인 사용 내역 ‘없음’, 최종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 으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결국 타인에 의한 수급자 급여의 타목적 사용 등 수급권 침해 우려와 급여 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 1,600,337원과 기초연금 135,720원은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2,883,199에 대하여는 지급하시기 바라며, 급여관리자 거주지의 관리비 등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출된 수급자 L의 복지급여 631,230원은 수급자에게 반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통장 세부 사용 내역을 전면 재점검하시어, 급여관리자 또는 제3자에 의해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인출·사용한 건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급여관리 점검이 이행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모금 및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1.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관리 소홀

가. 업무개요

연수구에서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아동과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 신고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을 통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나. 판단기준(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후원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뜻하며,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적정하게 접수·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이와는 별개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또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에 속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 외에, 시설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조손가정,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을 이용아동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시설 이용료의 경우 일반아동에 한하여 일정금액 한도 내 수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모두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사업안내 지침의 후원금 관련 사항에 따라 관리되도록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반아동’은 물론, 돌봄이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어 돌봄서비스의 우선적 제공을 필요로 하는 ‘우선돌봄아동’ 모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세대 대상의 후원금 모금내역 등 후원금 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시 ◀과에서도 20**년 **월 **일에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 군구의 관리·감독 철저를 문서로 통보한 바 있다.

다. 관계사실

감사대상 기간인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개소 후원금 모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소를 제외한 **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이용아동 보호자 등 ***명으로부터 총 53,940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된 사항이 확인되었다.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모금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총 *년간 이용아동 및 보호자 ***명으로부터 총 53,940천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세대별 후원 규모는 월 **천원부터 ***천원씩 지속적으로 후원하거나, 일부 후원자의 경우 월별 지속적인 후원금 이외에 일시금으로 ***천원, ***천원, ***천원을 후원하여 후원자 개인으로부터 총 **천원~*,***천원이 모금되었고,

이로 인해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아동센터가 이용아동 세대에게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연수구 지역아동센터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부서인 <과>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 모금 실태 파악 및 조치 등 후원금 관련 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감사대상 기간인 20**년 *월까지도 이용아동 세대로부터 후원금이 제한 없이 모금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2.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가. 판단기준(관계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비로 일부 사용할 수 있으나, 간접비 중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등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구체적인 지정 용도가 「재무·회계규칙」[별표]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

되도록 해야 하고, 그 외에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거나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여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군·구에서는 시설의 후원금이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나. 관계사실

연수구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확인 결과, 20**년부터 20**년까지 ✈
✈복지시설 □□에서 후생경비성 지정후원금 2,037,170원을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에 해당되는 선물 구입비 등 지정 용도 외로 사용해 왔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구 ▷과에서는 후원금 사용내역 점검을 소홀히 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 확보가 저해되었다.

3.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세입·세출 누락 등 결산처리 소홀

가. 판단기준(관계법령)

「재무·회계 규칙」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여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누락됨 없이 예산에 모두 계상하여야 하되,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1]~[별표4]의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업무의 효율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축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예·결산 내역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내역 등을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를 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시 소규모시설이 아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조까지의 서류(세입·세출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사업비명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중 후원금 수입명세서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후원 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 세입 누락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수입명세서 뿐 아니라, 후원금 사용명세서 등록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후원금 수입·사용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보고자료에 세입·세출 내역이 명확히 반영·작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바, 만일 부적정한 회계처리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출된 보고문서를 ‘반려’ 처리하여 시설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 제출된 보고서를 재검토해 회계 처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 처리함으로써,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에 따라 해당 시설의 결산보고서와 더불어, 후원금 수입과 사용 내역이 올바르게 반영된 자료가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해 3개월 동안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사실

연수구 감사기간 중 20**년부터 20**까지 보고된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결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상 후원관리를 위한 회계반영 등 후원금 수입·사용 등록 시, 자금 원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입 및 세출 처리를 해야 함에도,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 법인전입금(후원금)과 자부담, 비지정후원금 등 재원을 착오 반영함에 따라 당해연도 결산서 상 후원금 잔액(세입-세출)과 차기 연도로 이월된 ‘전년도이월금(후원금)’의 차액이 발생 된 채 결산서가 보고되었고,

후원받은 순서대로 투명하게 기록 관리된 「재무·회계규칙」 제20조 관련 [별지 제19호서식] 수입명세서(발생일자, 후원금종류, 후원자 구분, 내역, 금액 등)가 결산서와

함께 제출·보고되어야 함에도,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 후원금 수입 내역을 누락한 채 총 세입 결산 후원금과 불일치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시설의 결산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역을 검토·승인하고, 공고해야 할 연수구 ▶과, ▷과에서는 시설에서 제출한 연도별 결산서 세부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자료를 승인 처리 함에 따라, 명확성이 결여된 보완·수정 되지 않은 누락(불일치)된 자료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여과 없이 공시되는 등 후원금 회계처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사회복지시설 *개소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기관운영비 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후원금 2,037,170원을 시설회계 후원금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후원금 세입·세출의 편성·집행은 물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결산보고 시,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히 반영해 보고·공개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50%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우선돌봄아동이며, 이러한 돌봄 필요아동의 보호·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임을 숙지하시어, 아동세대가 경제적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아동세대에 대한 후원금 모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개요

연수구 ▷과에서는 등록장애인의 장애 상태 확인 등 재판정 기한 도래자의 의무적 재판정 업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표1]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되는 사항을 각 동에 안내하는 등 재판정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기관별 장애 재판정 대상자 업무처리 개요

보건복지부, 인천시	군 구	읍면동
<p>▶ 분기별 재판정기한 경과자 발제, 처리촉구</p> <p>- 분기별 장애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 안내 (기 통보자 중 미처리자 및 직전분기 기한 경과자)</p> <p>→ 심사의뢰 및 등록취소, 재판정유예 등 조치완료</p> <p>→ 기한 경과자 업무처리 절차 즉시 이행</p> <p>→ <u>향후 재판정기한 경과 및 부적정 처리사례 없도록</u> <u>군구 소관부서는 읍면동 업무처리 관리 철저고지</u></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1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통보] 재판정기한 경과자 지속발생 및 조치 미흡 시, 지자체 업무관련자 엄중 처분</p> </div>	<p>▶ 재판정기한 경과자 진행상태 관리, 독려</p> <p>▶ 행정복지센터의 재판정기한 경과자 부적정 처리 및 미처리 간에 대한 즉시 처리안내 촉구</p>	<p>▶ 재판정 예정자</p> <p>행복e음 현황판 재판정 대상 확인 재판정 안내, 촉구 등 업무처리 철저</p> <p>→ 재판정 안내 누락에 대한 민원 발생 최소화</p> <p>▶ 기한 경과자</p> <p>촉구서 통지에도 불응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실시, 장애인등록 취소</p> <p>→ 재판정 촉구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청문실시(장애인등록 취소) - 등록증 반환통보 등록증 반환</p>

2. 판단기준(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등록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맞는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재판정기한 3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판정기한 1개월 전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되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거주불명 등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기간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해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정유예 대상이 아님에도 촉구 기한 내에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7조에 근거하여 청문시작 10일 전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인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교부 방법으로 송달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만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호, 제5에 따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문실시 결과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청문결과 결정(장애인등록 취소)을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반환기한 2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반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장애인 재판정 예정자 안내(통보) 소홀, 재판정 기한 경과자 발생 및 기한 경과자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장애인 지원에 관한 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착오 없이 수행되도록 재판정 예정자 및 기한 경과자의 업무처리 상태를 지속 관리·독려하고, 부적정 혹은 미처리 대상자에 대한 조치 안내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 관계사실

연수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관리현황 확인 결과, 재판정(촉구)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유 부적합자에 대한 담당자 직권 유예처리, 재판정 지연처리, 재판정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

연수구의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 동에서는 재판정 기한이 도래한 등록장애인 **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혹은 촉구 통보를 하지 않았고, *개 동에서는 재판정기한 도래자 *명에게 재판정 및 촉구 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개 동에서는 재판정대상자 **명에게 재판정 기한 3개월 전, 혹은 1개월 전 해야 할 촉구통보를 통보기준일로부터 *일에서 최대 ***일 경과 시점에서야 시행하였다.

그리고, 장애 재판정 유예는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유예할 수 있음에도, **명을 병원진료를 사유로 문서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재판정 유예를 결정처리하였으며, **명 역시 *일부터 ***일까지 담당자 직권으로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유예사유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재판정 대상자의 유예결정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재판정기한 경과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장애등록취소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개 동에서는 재판정기한 경과자 **명을 청문 및 장애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 없이 대상자가 재판정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재판정 처리를 하였는데, 장애 재판정 기한일이 경과에 대해 재판정 기한일로부터 ***일, ***일, ***일, ***일, ***일, ***일, ***일이 경과된 뒤늦은 시점에 재판정 처리되었으며,

재판정기한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 ***일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재판정은 물론, 처분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연수구 장애인등록취소 처리현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재판정기한일로부터 **일에서 최대 ***일이 경과될 때까지 재판정 미이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대상자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등록취소를 진행하였으며, 취소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명의 경우, 취소신청서 제출일에 행복e음 시스템상 이력변경사유와 정도중지일을 등록처리하고, *일~*일 이후에 장애등록 취소에 대한 문서결재를 하였으며, 취소신청서가 제출된 익일에 문서결재와 행복e음 중지일을 등록처리 하였고, 취소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일이 경과 되는 시점에 문서결재를 하였고, 행복e음의 장애정도중지일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일 이후로 등록처리 되었다.

그리고, 취소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야 문서결재를 함에 따라, 문서결재일을 정도중지일로 등록하였고, 취소신청서 제출일로부터 *

일이 경과된 날로 정도중지일을 등록처리하고, 취소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일이 경과되는 시점에서야 문서결재를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시, 등록취소신청에 따른 취소처리 대상자로 제출되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등록취소신청서 및 결재문서가 전혀 없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정 미이행자와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회수 현황 확인결과, 재판정기한일 (20**.**.**.)로부터 ***일이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도 재판정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20**.**.**.에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아울러, 연수구 >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로부터 분기별 통보되고 있는 ‘재판정기한 경과자 처리안내’를 근거로, 전분기 기한경과(미처리 포함) 대상자 세부 명단 통보 및 대상자별 이행 내역 및 조치결과 확인 등 재판정 관리를 해야 하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업무처리 안내서와 동별 통계 내역이 첨부된 처리요청 공문만 통보할 뿐, 통보 대상자명단 확인 및 업무처리 절차 이행 사항 점검 등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함에 따라, 기한 경과(미처리)자가 발생이 지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재판정 기한이 경과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등 업무처리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②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촉구 통보, 재판정유예, 장애등록 취소, 장애인등록증 반환 등 일련의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

제 목 ○○동 ***번지 사용 및 관리·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연수구 ○○동 ***번지에 대한 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고 □.□장 및 ▲.▲장 등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2. 연수구 ♥협회 등의 ○○동 ***번지 일부 부지 사용허가 절차 미이행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연수구 ○○동 ***번지(총 ***,***m²) 부지의 소유기관으로써 해당 번지의 일부 면적(**,***m²)을 연수구청이 시 ♠과로부터 전대받아 사용하도록 승인한 공사의 「재산관리규정」 제37조에 따르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재산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나. 관계 사실

♠과에서는 20**. *월 공사로부터 시 ♣과에 사용이 허가된 연수구 ○○동 ***번지(총 ***,***m²)의 일부 면적(**,***m²)을 시 ♣과로부터 전대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후 해당 부지에 성인 □.□장, 리틀 □.□장, ▲▲장(이하 “□.□장 등”이라 한다) 각 1면을 설치하였으며,.

20**. *월부터 20**. *월까지 공사의 사전 승인 및 별도의 사용허가 관련 절차 없이 구두로 연수구 체육회 산하 연수구 ♥♥협회와 연수구 ♥♥협회에서 해당 부지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과에서는 공사의 재산 사용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을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전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연수구 ♥♥협회와 연수구 ♥♥협회에서 전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공사에서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3. ○○동 ***번지 □.□장 등의 관리·운영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이때 개방 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구에서 직접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일자 및 시간이 명시된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하도록 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 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관계 사실

♠과에서는 20**.*월부터 20**.*월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의 절차 없이 구두로 연수구 ♥♥협회와 연수구 ♥♥협회에서 ○○동 ***번지의 □.□장 등을 독점하여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한 검토 및 별도의 절차 없이 구두만으로 연수구 ♥♥협회에서 ○○동 ***번지의 □.□장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방법으로 구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과에서는 20**,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는
□ □ 장 등을 ♠과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연수구청에 해당 부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할 경우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련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기관경고] *년 *개월의 장기간 동안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두상으로
특정 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
요하여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 · 시정

제 목 미술품 보관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1조 및 제9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6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V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이하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품 등 총 **개의 미술품을 새울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2. 미술품 가격 재평가(실물감정) 미실시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미술품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미술품 보관·관리기준 - 2. 미술품 관리 세부 처리절차 - 가. 관리 기관 - 2) 소장·관리부서 - ○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따라 미술품 취득 후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며,

미술품의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 - 3. 미술품 가치 등급분류 기준 및 관리방안 - 가. 미술품 가치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미술품의 가격 기준으로 A·B·C·D 등급⁵⁾으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A·B등급으로 분류된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각 분야별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⁶⁾을 통해 실물감정을 한 후 작품가액에 반영하여 재산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C·D등급 미술품은 자치단체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계 사실

♠과에서는 20**년 이후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미술품 가격 재평가(실물감정)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A·B등급의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에 대한 가격이 재평가되어 작품가액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과에서는 C·D등급의 미술품에 대해 자치단체 미술품자문위원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 현재까지 연수구에는 미술품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등 예술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보존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미술품 총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3. 미술품 수요조사 및 예산 반영, 관리실태 점검 미이행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과의 물품관리관은 미술품 보관·관리기준 - 1. 미술품 관리 개요 -

5) (A등급) 취득가격 1,000만 원 이상 / (B등급) 취득가격 1,000만 원 미만 ~ 500만 원 이상 / (C등급) 취득가격 50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 (D등급) 취득가격 50만 원 미만

6) (전문기관)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미술품 감정협회, (사)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다. 취득에 따라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아. 관리실태 점검 등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사실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매년 실시해야 하는 미술품 수요조사 및 예산 반영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 *. *.에는 미술품 수요조사 없이 ‘&&&’(기타 미술품, 취득가액 *,***,***원)을 신규 취득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매년 **월 **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미술품의 관리실태 점검을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3. 미술품의 보관·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 - 2. 미술품 관리 세부 처리절차 - 나. 관리방법
- 3) 보존 및 관리 - ○ 명제표 부착 관리에 따라 미술품 현품에 “명제표”를 부착하여 관리하되, 관리번호는 미술품대장의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 사진촬영 / 편집요령에 따라 미술품 사진은 현품을 직접 촬영하되 작품의 등급 분류, 감정의뢰 기초자료 및 작품감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

하게 촬영하여야 하고 창문이나 커튼 불빛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그림과 촬영자의 눈높이가 맞도록 정면에서 촬영하고 편집 시 사진의 액자 등을 절삭하여야 한다.

나. 관계 사실

연수구 새울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총 **점의 미술품의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사기간 현재 총 **점의 미술품 전체가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에 따른 명제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채로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본관 1층과 본관 3층에 전시되어 있는 한국화, 서양화 등 미술품 총 *점은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로 관리되고 있었고, 해당 미술품의 출처를 확인한 결과 감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미술품의 관리 부서, 취득 시기 등 미술품의 출처도 파악할 수 없는 등 ♠과에서는 미술품의 보관·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아울러, 연수구 새울행정 미술품관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총 **점의 미술품 사진 전체가 빛 비침, 정면 미촬영, 액자 미편집 등 감정의뢰 기초자료 및 작품 감상용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진이 등재되어 있는 등 ♠과에서는 미술품관리시스템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4. 대여 미술품, 타인 소유의 미술품 관리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미술품 보관·관리기준 - 1. 미술품 관리 개요 - 마. 대여 미술품 등의

관리에 따라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을 사용·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명세표에 대여미술품 또는 개인소장품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2. 미술품 관리 세부 처리절차 - 나. 관리 방법 - 2) 등재 - ㅇ 대여 미술품 / 타인 소유의 미술품 관리에 따라 대여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사실

감사기간 현재 연수구청 본관 1층 로비에는 명세표가 부착되지 않은 ㄱ **점이 전시 중이었는데, 20**. **월 ㄱ의 소유자인 P작가가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후 ㄱ의 홍보를 위해 연수구청에 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ㄱ의 관리 부서인 ㉠과에서 20**년부터 연수구청 1층 로비에 ㄱ **점을 전시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술품 총괄 관리부서인 ♠과,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미술품에 준한 미술품 관리 절차 및 전시 장소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한 후 타인 소유 미술품이 전시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해당 장소에 장기간 타인 소유의 미술품이 전시되도록 하는 등 미술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기관경고] 감사대상 기간동안 관련 규정에 따른 미술품 가격 재평가, 미술품 수요조사, 관리 실태 점검 등을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사항, 미술품시스템에 등록된 미술품 총 **점 전체를 부적정하게 보관·관리한 사항, 타인 소유 미술품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은 기관 차원의 주의가 필요하여 엄중히 경고 하오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의 소재를 파악하여 미술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시고, 미술품에는 명제표를 부착하여 보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관 1층에 전시되어 있는 타인 소유의 미술품 **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 기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보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〇〇센터 사무 위탁 및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〇〇센터의 대관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 *. *.부터 〇〇센터의 일부 사무를 ㅁ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조례 제4조⁷⁾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위탁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연수구 〇〇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도에 〇〇센터의 대관업무, 공공요금 분납처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과에서는 이에 대해 연수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월에 〇〇센터 대관업무 등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⁹⁾ 및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¹⁰⁾를 사유로 ㄷ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무를 위탁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란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의 규정이 사무 또는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8)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9)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0)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제1항의 지방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는 ㉠㉡센터 대관업무 및 공공요금 분납처리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및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는 ㉠㉡센터의 사무를 수의로 위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과에서는 사무 위탁과 관련된 규정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대관업무, 공공요금 분납처리 사무 위탁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례 제7조의 공개모집,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센터 대관업무, 공공요금 분납처리 사무를 수의로 위탁하였다.

또한, 수탁기관인 ㉠에서는 감사기간 현재까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는 등 ♠과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〇〇센터 대관업무, 공공요금 분납처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탁기관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노래연습장업 교육위탁 및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음악산업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따라 관내 노래연습장업 총 ***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위탁 관리 소홀

「음악산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조례 제4조에 따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매년 「(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신규 및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위탁의 재협약과 관련하여 연수구와 협회가 체결한 교육 「노래연습장

업자 위탁교육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6조에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해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교육위탁 관련 재협약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협회와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위탁 재협약을 체결하며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협약서에 체결 일자를 ‘20**년 *월 *일’ 등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2.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협약서 제4조제4항에 따라 협회는 위탁교육 수행 시 교육계획안을 연수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8조제1항에 따라 협회는 연(年)교육·분기교육·월 교육·기타 교육 등 각 교육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결산을 포함한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결과를 연수구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협회의 교육계획안 제출 및 구의 사전 승인 없이 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년 교육 종료 후에는 협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결과를 문서로 보고받지 않았고, 이에 대해 업무 결과 제출을 협회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년도에서는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보조금 교부,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조례 제19조 각 호¹¹⁾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교부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며 협회로부터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협회에 보조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금 교부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협회로부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¹²⁾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의 보조금 정산을 하며 사무용품비, 다과비, 인건비 총 *건, 총 ***,***원에 대해 사용 목적, 산출 근거 등의 확인 없이 정산하였으며, 20**년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협회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하며 총 **건의 사용 내역에 대해 지방보조사업비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교부,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12)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및 교육 실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업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협회로부터 통지받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연수구 ☐☐센터 및 ■■센터 민간위탁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구 ☐☐센터 및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위탁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20**.**.*. (주)■■■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승인

하여 센터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또한, ☒과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의 위탁기간 만료일인 20**.**.**.의 60일 전인 20**.**.**.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까지 수탁기관인 (주)■에서 센터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5개월이 지연된 20**. **.에 승인을 요청받아 20**. **.에 승인하였으며,

20**.**.**.까지 연수구 ☒☒센터 및 ■■■센터 사업 성과를 측정하여 사업의 재위탁 검토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된 20**.**. *. 이후인 20**.**.**.부터 20**.**.**.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0**.**.**.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간위탁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문화재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따라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업무, 현상변경 행위 시 착수 및 완료신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지적내용]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착수 신고 누락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2항, 조례 제18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7조제7호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2. 개별기준 바목에 따라 1차 위반은 15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기한 내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착수 및 완료신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 **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과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이 현상변경을 착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의 접수를 받지 않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현상변경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미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문화재수리 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문화재수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문화재수리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제1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표 2] 2. 개별기준 라목 4) 문화재수리등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시 ♠과에서는 군·구 문화재 담당부서에 ‘문화재 수리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매년 시행하며, ‘수리(감리)업자가 문화재수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리(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자(군·구 감독관)의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승인만으로도 문화재청으로 자동 제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알리고 수리(감리)보고서 등의 제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따라서, ♠과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완료하였을 때 기한 내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수리보고서를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업자가 기한 내 수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ㄷ 및 ㄹ 보존처리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시 ●과에 20**. **.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간이 경과된 20**. **.에 제출하였고, 이를 온나라시스템에 비전자문서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시 ●과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수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건축허가 관련 부서에 ‘문화재 현상변경 착공 신고 및 준공 처리 알림 협조 요청’ 등을 통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신고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연수구청 △△선수단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에 따라 19**년 *월부터 연수구청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1.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선수단의 감독은 선수단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과에서는 연수구청 △△선수단을 운영하며 매년 11월 30일까지 △△선수단의 감독으로부터 연간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20**.**월부터 감사기간 현재까지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선수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승인하지 않았으며, 부서에서도 선수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연수구청 △△선수단을 운영하는 등 △△선수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였다.

2. 우수선수 유치비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과에서는 우수선수의 유치를 위해 조례 제9조에 따라 연수구청△△선수단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에 따라 계약선수에게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또한, 국세청 ☆과-*****(20**.*.**.)에 따르면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구청과 △△단 선수와의 입단 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우수선수 유치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는 선수들에게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한 후, 계약조건에 따른 근무기간 동안 매월 안분한 금액을 급여에 합산하여 소

득세법 제1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별표 2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년과 20**년에 총 **명의 △△선수단 계약선수에게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하며 우수선수 유치비를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¹³⁾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3호¹⁴⁾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총 55,360,800원(추정)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소 부과하는 등 우수선수 유치비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착오 부과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55,360,800원(추정)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등에 따라 수정신고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⑩과

내 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¹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 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 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4]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탈의실· 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깔판·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을 매일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 목욕실 등의 청결 및 수질관리 등 위생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15)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이용업, 미용업을 하는 자는 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이·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하여야 하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별표4]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에 따라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및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7]에 따라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제1항에 의하면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아니한자,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에 따라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병과 처분하여야 한다.

연수구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총 **건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법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건, 제4조에 따른 위생관리의무 위반 *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개 업소는 1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

㉠과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여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이용업과 미용업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만원을 부과하고, 목욕장 청결 위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목욕장업은 경고와 과태료 **만원을 부과하였어야 하며, 1차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행정처분과 과태료 ***만원을 병과 처분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개소에 대해 행정처분만 실시하고 과태료를 미부과 하는 등 처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및 시행규칙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7]에 따라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¹⁶⁾ 혼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에 따라 행정처분 하여야 한다.

[별표23] 행정처분 기준[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72조 및 법 제75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씻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시정명령	영업정지 2일	영업정지 3일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자료인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2021)’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23 Ⅱ.개별기준 제3호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1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식품위생법」 제46조)

※ 식품공전: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함

분 류	내 용
동물성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
식물성	종류가 다른 식물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
광물성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

연수구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총 ***건의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건은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인 조리장 내 위생해충 발견 위반사항으로 *건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인 식품접객업소 금속 이물 혼입으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

㉠과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 제3조(조리장 내 위생해충 발견) 위반건은 20**. *. **. 개정되어 20**. *. *.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어야 하며, 식품접객업소 금속 이물 혼입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20**. **. **. 개정 시행된 시행규칙 [별표 23] II. 개별기준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2일을 처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리장 내 위생해충 발견 위반사항은 과태료 **만원을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 금속 이물 혼입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처분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다.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감경적용 검토 소홀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제3항 및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별표2] 1.일반기준 다항, 라항에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 ㉠과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 *월 ~ 20**. *월까지 건강진단 위반으로 총 **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시 시행규칙 [별표2] 1.일반기준 다항 2)호에 따라 건강진단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별표2] 1.일반기준 라항 2)호에 따라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감경기준만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과에서는 건강진단 위반 *건에 대해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축산물 위생검사(점검) 및 위생교육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 ㉠과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의 영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영업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축산물 영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 축산물 위생검사(점검) 업무 소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¹⁷⁾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법 제27조, 제28조 또는 제35조부터

17)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출입·검사를 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실시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의 연간 위생검사(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상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수 위생검사(점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장만 위생검사(점검)하였으며, 직전 종합감사(20**년도 종합감사)에서도 동일사항으로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연 1회 이상 전수점검하지 않는 등 위생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관리 소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0조(위생교육)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¹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의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및 축산물 위생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05호) 제11조(축산물 위생교육 실시)와 제12조(교육결과 보고 등)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여 허가(신고)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허가(신고)관청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7조(과태료)제4항제2호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60만원을 구청장은 부과하여야 하며,

18)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11]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 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는 위생교육 대상자의 교육수료 여부 확인 및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위생교육 미수료자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자 ***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직전 종합감사(20**년도 종합감사)에서도 동일사항으로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생교육 미수료자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20**년도 위생교육 미수료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조치하시고, 현지확인 결과 과태료 처분 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의료기관 휴·폐업 관리 소홀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라 구청장은 의료업

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고 휴·폐업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따르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면서 *개소에 대해서는 휴업연장 신고 시 안내문 게시여부를 미확인 하였으며, *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안내문 게시사항 중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게시되지 않았음에도 의료법 제40조제5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 없이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존 절차이행 소홀

「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진료기록부)나 제23조(전자

의무기록)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환자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각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일부개정(2023.3.2. 일부개정/시행 2023.3.5.)에 따라 2023. 3. 5일 이후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인 20**, *월 ~ 20**, *월에 총 **건의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처리와 **건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을 허가하였다.

◎과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첨부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는 ‘J J 한의원’ 등 **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휴·폐업일 당일 휴·폐업신고서의 붙임서류로 신고서와 같이 제출받아 처리하였으며,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개정시행일(2023.3.5. 시행)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 *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 후 허가하였어야 하나 진료기록 보관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없이 허가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처리 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¹⁹⁾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19) 마약류관리법 제2조(정의) 제5호 : “마약류취급자”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라. 대마재배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바. 마약류 관리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 등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해당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확인한 후 이를 [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해야 한다.

[표1]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회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같은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 따라 마약류 저장장소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고, 마약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를 포함한다)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교육·홍보자료로 게시된 「폐기 보고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안내 가이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폐기는 중화, 가수분해, 산화, 환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표2]의 예시(다른 방법도 가능)를 참고하여 취급자 조건과 환경에 따라 폐기 방법을 선택하고, 이후 폐기물은 의약품 폐기물 버리는 방식에 따라 폐기한다고 되어 있다.

[표2] 폐기방법 예시(폐기보고 및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안내 가이드)

제형 구분	예 시
주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앰플이나 바이알에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 ■ 마약류에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 아닌 것으로 변화 ■ 고무마개가 있는 바이알은 마약류를 꺼내서 다른 폐기물과 섞어 버리거나 주사기로 물을 넣어 희석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버려야 함
경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나 다른 액체를 넣어 희석 ■ 잉크나 베타딘을 떨어뜨려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 자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자료 재구성

또한 안내 가이드의 마약류 폐기 근거 서식에 따르면 마약류 폐기일, 폐기 방법, 입회자 등 정보확인을 위하여 폐기 근거 서식을 남기고, 실제 근거자료인 사진(영상 등)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폐기 근거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는 ‘마약류를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가급적 폐기 전·후, 의약품 폐기물 봉투에 투입한 모습 등 폐기 단계를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

◎과에서는 20**, *월 ~ 20**, *월까지 마약류취급자로부터 총 ***건의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을 받아 폐기 처리하였으며, 마약류의 폐기 시에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에 따라 적정한 폐기방법을 선택

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 단계를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사고 마약류 등을 폐기처리하면서 마약류 패치 **건을 중화·회석 등의 과정없이 단순절단 또는 패치를 포장지에 부착하는 등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폐기하였으며, 마약류 시럽 및 주사제 **건은 폐기 전·후 증빙자료로는 시럽류가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되었는지 여부, 주사제 폐기 및 회석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없는 사진이 증빙되어 있으며, 마약류 패치와 주사제 등 총 **건 모두 최종 의료폐기물 봉투에 투입하여 배출·폐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한 확인할 수 없는 등 마약류 폐기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켜 폐기하여 주시고, 폐기 근거 증빙자료(사진, 영상 등)는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 사실 및 폐기 단계를 육안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찰,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기준)에 따르면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이며, 선천성이상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천성이상의 정도·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 정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VI.2.나.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범위 및 산정방법은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을 금액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고,

지원 제외 항목은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이며,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의료비 지원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에 의거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예산부족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 또는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의료비의 항목별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일부본인부담금 부분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한다.

□과에서 20**. *월 ~ 20**. **월까지 지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총 ***건 13,907,700원의 지원내역을 확인한 결과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의료비로 지원할 수 없는 제증명서 발급비용, 체온계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산정하여 총 506,360원의 의료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의료비 지원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건의 의료비 지원을 1개월이 경과하여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과다지급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06,36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지원 제외항목 누락 및 지연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 관 경 고

제 목 국제회의 행사관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및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고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년 연수구는 제*차 □□□□ ○○○○ 국제회의를 10월에 개최하며 인천광역시로부터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억원을 교부받았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및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군·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으면 교부 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후 집행하며 교부조

건이나 용도 위반 사용하거나 절차상 하자, 위법 부당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금 반환 또는 다음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토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의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등으로 업무추진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연수구는 20**. *. **. 인천광역시에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국제회의 행사장 주변 정비를 위한 ‘○○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비 **억*천만원중 *억원이 부족하여 특별재정교부금을 신청하여 20**. *. **. 교부받았다.

그러나 연수구가 신청한 ‘○○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는 연수구의 자치사무로 매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여 온 사업이며 20**. **월에 20**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본예산에 **억*천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다.

따라서 20**년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사업이 아님에도 연수구는 국제회의로 인하여 행사장 주변 정비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연수구는 교부목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20**년도 추경예산 등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고 다음연도인 20**. *월에 20**년도 *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

연수구는 20**. *. **.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국제회의 행사장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신청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동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토록 요청하였다. 따라서 연수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목적인 국제회의 행사장 주변 정비를 위하여 신속히 20**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사용한 후 인천광역시의 특별조정교부금 관리현황 점검시 이를 확인하여 20**년도 제*회 추경예산편성시 ‘20**년도 ○○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비로 20**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구비 **억*천만원중 *억원을 감액하고 20**년도에 국제회의 행사장 정비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억원을 편성하였다.

연수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집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위반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것처럼 신청하였고 당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후 다음 연도 추경예산에서 구비를 대체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기관경고] 특별한 재정수요가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교부 신청하거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산편성없이 집행하고 사후예산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감사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관경고를 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기관경고·주의

제 목 사회취약계층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관리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14조에 따라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고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20**년 연수구는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억*천만원을 교부받아 공공 마스크 공급시설을 구축하였다.

1. 공유재산 사용허가 부당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연수구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조성하여 20**.*월에 개소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같은 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에 따라 대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사용허가)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대부)에 따라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산의 관리를 같은 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의거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사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구에서 인천광역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한 연수구 ○○동 ***-*, *층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은 연수구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용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며 마스크 자동화설비도 마스크 제조목적의 행정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으로 운영되는 물품이다.

그러므로 연수구는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설비를 대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74조에 따라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인 공공마스크 제조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

위에서만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행정재산 및 물품의 본래 목적이며 용도인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및 설비를 사용허가와 대부대상으로 정하여 민간에게 임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임대사업자를 공모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대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을 민간기업이 수익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임대하고 연수구는 **,***천원의 임대수익을 세외수입 처리하였다.

2. 임대계약 해지를 사유로 공용재산인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폐기 부당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 *. *.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 및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대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취약계층에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천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억*천만원을 신청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연수구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대하여 교부결정하며 교부조건으로 ‘코로나19 및 중장기 마스크 생산·수요량 증감 추이와 사업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정하며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연수구는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공공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목적 및 인천광역시의 교부조건에 따라 20**, *. **,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 및 주요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코로나19이후 평상시 미세먼지 예방 등 취약계층 등에게 연간 **만장 공급을 계획하였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시·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 및 제36

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이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²⁰⁾」 제62조(조정교부금의 교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은 군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심사하여 교부하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수구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라 코로나19이후에는 미세먼지 예방 등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공공마스크 공급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연수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0**. *. *. 마스크 제조시설을 개소하였으며 이후 20**. *월부터 **월까지 *개월간은 약**만장 정도의 공공마스크를 발주하여 임대사업자가 생산·공급하였다.

그러나 연수구는 20**. **월부터 20**. *월까지의 약*만장 정도의 공공마스크만을 발주하여 교부목적인 미세먼지 예방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공공마스크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연수구의 공공마스크 미발주로 인한 운영악화로 임대계약 2차연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건물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 *. **. 민선*기 연수구 인수위원회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운영 중단하고 ▲▲센터를 마스크제조시설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후 연수구는 20**. *월 공유재산 허가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마스크

20) 「인천광역시 재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정 2023. 07. 14.

제조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를 사유로 20**. *. **. 공공마스크 제조시설 운영 종료를 결정하고 이후 제조시설 및 생산 설비 등을 폐기하였다.

연수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따른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 및 주요운영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마스크 제조시설의 새로운 임대사업자 공모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운영방안의 변경 등을 추진하여 관내 사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으로 공공마스크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부당하게 민간에게 임대한 후 단 9개월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10개월간은 교부목적인 공공마스크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시설운동을 종료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억*천만원으로 조성한 시설 및 설비를 폐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3. 관계기관 등 의견과 검토결과

연수구는 공공마스크 제조시설을 민간(사회적협동조합)에게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사용허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에서 주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같은 조항의 단서사항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다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적용하여 사용허가하였기에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등으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연간 운영비가 *억원으로 연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시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 및 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마스크 공급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의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인 코로나19 및 중장기 마스크 생산·수요량 증감 추이와 사업 관련 법령을 검토 추진에 따른 연수구의 ‘마스크 공급체계 구축 및 주요운영계획’에 코로나19 이후 평상시는 미세먼지 예방 등 취약계층 등에게 연간 **만장 공급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운영비에 대하여도 검토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연수구는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예산을 20**년도에 편성하지 않아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 없었으며 20**, *월 임대사업자의 계약해지를 사유로 시설 운영 종료를 결정하였기에 운영비 부담주장은 감사에 따른 사후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기관경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목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감사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라 기관경고를 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통보 · 주의요구

제 목 하도급공사 계약 및 관리 부실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공사 및 계약 관련법령에 따라 자체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등 하도급 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의 일괄하도급 제한 위반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설계내역상 특허공법이 주된 공정으로 발주되는 「○○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등 *건의 공사를 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기술협약을 체결한 후 일반경쟁 입찰을 하였으며 낙찰자와 계약한 후 특허공법은 기술협약에 따라 하도급공사로 시공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도

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²¹⁾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영업정지(8개월) 또는 과징금²²⁾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공법으로 공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²³⁾」에 특허공법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보유자가 특허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허공법이 공정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고 주된 공사인 경우에 입찰한 후 주된 공정인 특허 부분의 공사를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기술보유자에게 하도급하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2. 18.>

22) 과징금 비율 : 도급금액 1억원 이하 24%,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30%

2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부를 하도급하는 결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괄하도급 제한을 위반하므로 입찰 및 하도급 승인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등 *건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내역상 특허공법이 주된 공정임에도 입찰을 한 후 특허공법을 이유로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주된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지하차도 신축이음 보수공사」 등 *건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한하고 일괄하도급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2.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전기공사업법 분리발주 위반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따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전기공사의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고 전기공사를 제외한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년 ‘○○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하여 ○○(주)와 계약하였다.

‘○○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개선공사’는 공간악취 탈취설비 신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의 공사로 기계와 전기로 실시설계를 하였다.

따라서 연수구는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하고

탈취설비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종합건설업으로 통합하여 발주하였고 도급사로부터 하도급 통보에 따라 전기공사와 탈취설비공사를 각각 전문공사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여 하도급 공사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위반하였다.

3. 특허공법 하도급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동 □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건의 공사의 비굴착보수부분에 대하여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인 ㉠㉠(주)와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계약시 금지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함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같은 지침에서 정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기술·특허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에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1항에 의거 도

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하수급인 및 제29조의 2조 제1항을 위반한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같은 법 제9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6조에 따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구는 특허공법을 하도급 승인하는 경우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여 시공과 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 제한에 따라 다시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 ㄱ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건의 공사에 대하여 특허 공법에 대한 특허보유자로 발주기관인 연수구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는 연수구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제4조에 따라 본인의 기술력이나 본인이 보유한 특수한 장비 등으로 하도급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은 ‘○○동 ㄱ아파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건의 특허 공법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다른 업체의 장비와 인력으로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였다.

㉠㉠(주)에서 하도급계약으로 시행한 비굴착보수분야 *개 공사의 하도준공내역서는 노무비와 재료비만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주)이 아닌 다른 업체가 장비와 인력으로 ㉠㉠의 특허분야를 시공하였거나 다른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였다면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하여 시공하게 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도급사업자인 (주)☆☆, (주)☆☆은 도급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관리에 대한 책무와 발주기관인 연수구(■과)는 공사감독으로써 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행위에 대한 확인과 관리를 하여야 하나 하도급 공사현장에 다른 업체의 장비와 인력으로 하도급 공사가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통보] 다른 업체의 장비와 인력으로 시공한 특허공법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관련법령 위반시 조치하시 바랍니다.

[주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하지 않도록 공사의 설계 및 발주, 하도급 승인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분리 발주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특색등 설치공사 관급자재 조달구매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년 「○○동 상업지역 특색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특색등 설치를 위하여 꽃과 나비 디자인의 LED경관조명기구와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등 *종 ***개를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 물품으로 구매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에 관계된 담당자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법령, 그 밖의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한 물품

을 수요기관이 구매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따라 수요기관 및 제3자 단가계약 업체는 조달청과의 제3자 단가계약 계약조건에 위반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자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연수구는 20**년 「○○동 상업지역 특색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며 경관조명 기구 중 특색등이 설치된 암대 **개를 설치하기로 설계하였으나 특색등이 설치된 암대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물품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연수구는 특색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개 물품 중 조달청에 단가계약된 물품인 LED경관조명기구이외에 특색등이 설치된 암대 **개 31,980천원에 대하여는 일반입찰 등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조달청과 단가계약된 (주)■의 가로등주부속자재인 스테인리스 암대로 계약을 발주하고 실제 납품받은 물품은 특색등이 설치된 암대로 납품을 받았다.

연수구는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3자 단가계약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반입찰 등을 하지 않고 특정물품을 구매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시스템 관급자재 구매 계약예규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년 「인공지능기반 ☆☆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시행하며 교통관제시스템 등 **종 ***개 관급자재를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 물품으로 구매하였다.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입찰 및 계약시 금지사항²⁴⁾으로 수의계약 시 규격서나 지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지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설

24)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지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지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계서에 표준규격으로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관급자재의 물품구매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최종 선택하여 조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20**년 「인공지능기반 ☆☆ 시스템 설치 공사」의 계약을 의뢰하며 설계내역서에 식별이 가능한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구매를 의뢰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발주부서에서 명시한 특정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수구■■에 대한 차량 직접 지원 부적절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년 연수구 ■■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전환에 따른 업무대응을 위한 ■■의 보조금 증액 및 차량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차량 *대를 구입하여 연수구■■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차량을 연수구 ■■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69조(보관의 원칙)에 물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무상대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²⁵⁾에만 무상으로 대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수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수구 재산으로 관리되고 보관하여야 하는 연수구 소유의 등록차량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연수구■■■에서 연수구 소유의 등록차량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연수구 ■■■에 지원한 차량을 회수하여 공용재산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7. 12., 2018. 12. 18., 2019. 7. 2., 2023. 8. 2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공유 재산 관련 부서에 제출하고 있다.

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재산관리관(●과)은 매년 소관 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에 따르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본 조

례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 별표1 「구 본청의 사무전결 사항」을 살펴본 바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 건에 대해서는 전결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는 20**년부터 20**년까지 *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를 별도의 전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아닌 임의로 ●과장 결재만을 받고 시에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개선]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관련하여 전결 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여 임의로 ●과장 결재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처리 미흡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는 공유재산의 관리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 등이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제회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 및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으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수구는 공유재산으로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배상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 외 2개 과는 취득일 기준 최장 19**. **. *, 최단 20**. *. **부터 현재까지 건물, 선박 또는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개소의 건물에 대해 손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연수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내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손해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발생시 복구비용 등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또는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등 적의 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²⁶⁾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 1호부터 24호까지 수의의 근거가 열거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공공가치 및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에서는 **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의 사유에 대한 내부검토 없이 사용허가를 한다는 내용으로만 내부결재를 받아 업무처리하였다.

-
- 26)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 24. 생략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익 가능 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공예금계좌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1조, 제5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등이 취급하며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금 등의 출납·보관에 관해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회계책임관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결과 일상경비등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등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 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서의 카드결제 및 부서명의를 보통통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카드사용내역이나 통장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세입조치 대상 현금 등이 발생한 경우 기한 내 금고에 세입조치 등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연수구 ■과 외 2개 부서에서는 카드 결제계좌 및 부서명의를 보통통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세입처리하여야 할 이자 1,117,783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수납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공공예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세입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반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및 감독부서 등에서 예금계좌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4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차량용 유류 구입 시 ‘공공 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고 있다.

「조달사업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 외 4개 부서에서는 20**년, 20**년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 이라 한다)에서 고지한 유류구매카드 이용에 따른 조달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넘겨 조달청으로부터 카드 이용 수수료 납부 독촉을 받았고, **건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조달 수수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
수수료 납부 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보면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에 한하여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현 ‘◇과’로 이하 이와 같다)에서는 「■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 전 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태양광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해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과-****, 20**. *. *.)을 수립하고 자재선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과에서는 심의를 위해 대상품목 적정성 검토서와 조달우수제품 구매를 위한 조달청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우수제품 등록업체 리스트 및 심의대상 업체 비교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에게 업체별 심사자료 및 규격서, 평가항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과의 심의대상 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등록업체 총 **개사를 대상으로 BIPV와 방재기술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개사를 먼저 선정한 후 임의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소재지 업체로 한정하여 *개사(인천*, 경기 *)를 심의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선정된 *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개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또한, 업체별 가격 및 기술내용 자료를 보면 소요사의 규격 자료에 업체명이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채 제공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총 **개사 중 해당 성능 충족대상 제품 *개를 선택하고 그 중 서울, 인천, 경기 소재지로 한정하여 심의 상정한 것은, 태양광 관련 사업 추진 시 하자관리, 공정관리 등 사업 추진 시 원활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에 대한 판단

태양광 관련 사업 추진 시 하자관리, 공정관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소재지로 한정하여 심의 대상 업체를 상정한 것은 조달청 조달 우수제품 등록업체에 대한 연수구의 임의적 판단으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개 업체가 불필요한 지역 제한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사실이 있다. 또한, BIPV와 방재기술을 충족한 *개 사 제품 전부를 놓고 선정기술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하는 것이 대상 선택의 폭이 넓어 적정 제품을 선택하는 데 유리하므로 연수구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령에 근거하여 관급자재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시에 심의 대상 업체선정에 있어, 대상이 되는 업체가 부당하게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용역 및 물품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실, ㉡과

내 용

1. 특정업체·특정규격 설계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부적절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20**. *월 행정안전부 주관 「△△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 구축 계획’(20**. *. **.)을 수립하고 ‘연수○○ 구축’에 필요한 계약 업무를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에서 제한요령을 보면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시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 · 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 기술지원사 (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연수구 ▽과(현 ‘㉠실’로 이하 이와 같다)에서는 20**. **월 ‘연수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계약업체가 제출한 ‘인천연수구 청 ㉠㉠ 시설’ 구축시방서(일반) IV.시스템 구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재선정심의 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특정규격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과에서는 20**. *월 ‘연수구 ㉠구축’ 물품 구입 계약을 추진하면서 물품에 대해 (주)㉠㉠, (주)㉠㉠과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 대상 물품을 확인한 결과 온에어/제작 방송용 믹싱 콘솔과 Radio Automation Software 는 ㉠㉠ 社 (Netherland의 믹싱 콘솔 설계 제조업체) 제품으로 ㉠㉠는 한국 판매처이며, 나머지 *가지 제품은 총판매처와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조사·기술지원사가 아닌 (주)㉠㉠, (주)㉠㉠과의 물품공급 협약은 부적절하였다.

2.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미제출 업체와 계약 체결 부적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 기준과 방법에서 제한요령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²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 ·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에서는 ‘연수구 ○○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20**. *월 ●과로 물품 구입 계약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과에서는 20**. *월 공고문에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과 설치를 위하여 제조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및

-
- 27)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 인가 · 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 관련 필수 자격증 사본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명기하고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첨부하여 물품 구매 견적제출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입찰 개찰 후 낙찰 1순위 업체인 ☒☒주식회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였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인 20**. *. **.까지 물품 납품 이행을 완료하지 않아, ☑과(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 변경, 현 ‘㊦실’로 이하 이와 같다)에서는 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추진방안을 내부 검토 후 20**. **. **. ●과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과에서는 20**. **. **. 계약상대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이행보증금 3,784천원에 대한 세입조치와 함께 6개월 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훈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계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조달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회과

내 용

회과에서는 20**년, 20**년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달업무²⁸⁾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왔다.

1. 조달 물품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소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8) 전자조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대지급한 대금 및 수수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조달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대지급했거나 대지급할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해야 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에서는 20**년, 20**년 주차장 특별회계로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조달 물품 계약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는(이하 ‘조달청’이라 한다) 조달 물품 계약 건에 대해 각각 대금 및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입 기일 내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과에서는 총 **건의 조달 물품 계약 중 **건에 대해 대금 및 수

수료의 납기를 놓쳐 총 1,864,23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20**년 ‘○○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관급자재 구매 건 중 ‘메쉬웬스, 카스토퍼, CCTV 구매’ 건은 2차례, ‘레미콘 구매’ 건은 3차례의 납부 독촉을 받은 이후에 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조달 물품 대금 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납부 기한 준수 소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로서 전자입찰을 직접 실시하는 수요기관, 전자입찰을 통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용수수료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田과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 상 조달업무 처리에 따른 이용 수수료의 납부 기한을 넘겨 인천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20**년도 *차례, 20**년도 *차례, 총 *차례에 걸쳐 이용수수료 납부 독촉을 받았다.

또한, 20**년도에 부과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는 회계연도를 넘겨 20**년도 납부 독촉 이후에 납부하였고, *건의 이용수수료 체납 건에 대해서는 총 2,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 및 이용수수료 지급 기한 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선 요구

제 목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 미추진

기 관 명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두어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는 연수구 ●과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선정된 위원 중 2/3 이상 위원만 출석한 경우 위원 수에 관계 없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7인) 미만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내부규정으로 평가위원 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 내부규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에도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²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의사항 통보 이후 인천광역시에서는 20**. *. **. 같은 사항을 관할 군·구로 발송하였으며, 연수구 ●과 용역계약 담당자는 20**. *. **. 해당 문서를 접수한 후, 20**. *. **. 관련 내용을 전 부서에 공람하였다.

그러나 ●과는 주의사항을 공람만 하였을 뿐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 개정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0**. *. **. 인천광역시 통보 이후 진행된 여섯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두 건의 용역에서 이러한 미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평가위원 수가 7인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그대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개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최소 인원수를 미충족한 상태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9) 제5조(위원회의의 진행)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재공고입찰 운영 소홀

기 관 명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최초 입찰 이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어서 재공고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최초 입찰 공고문에서 공고기한만 변경하고 입찰참가 자격 등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다시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20**년 △△ 교육 용역 등 *건의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최초입찰공고 후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자, 새로운 공고가 아닌 재공고를 실시하면서 공고기한만 변경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여 공고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입찰 공고 등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 훈계 요구

제 목 경쟁입찰 대상사업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연수구

관 계 부 서 圖과

내 용

연수구 圖과는 ○○교육 관련 전자통지(전자고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과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의 용역계약(계약금액 계 105,955천원)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1.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하여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 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관계사실

연수구 區과는 ○○통지서 전자통지(전자고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과 ○○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의 두 건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과업의 성격 및 수행 가능 업체, 타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내용이 유사하거나 두 용역을 모두 수행 가능한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 이상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단일용역으로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부서는 20**년부터 20**년까지 ○○교육 관련 *건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단일용역으로 통합발주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각각 운영계획 수립 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주식회사☒☒)와 *개년 총 *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연수구 區과가 ○○통지서 전자통지(전자고지) 및 전자출결 시스템 운영과 ○○ 사이버교육 위탁 운영을 단일사업으로 통합 발주하였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의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다수의 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며,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1인 견적에 따른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추정차액 비교 : 7,835천원)으로 계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경제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부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어긋나게 단일사업을 해마다 *건으로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해당 용역 수행이 가능한 불특정 다수 업체의 경쟁 입찰 참가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함으로써 특혜시비 발생 우려를 초래하였고, 기초금액 대비 95%의 금액으로 계약하여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3.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사항

ÖÖ교육 전자고지 및 전자출결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업내용은 교육 훈련 통지서 모바일 발송, 집합교육 대상자 출결현황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ÖÖ 사이버교육 위탁 용역은 「ÖÖ 기본법」 제23조(ÖÖ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라 ÖÖ 교육훈련 운영비(국비30%, 지방비 70%)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업내용은 ÖÖ교육 사이버시스템을 운영하여 ÖÖ 대원들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두 용역 사업의 성질이 다르며,

비록 동일한 계약업체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이 다르고 사업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개별 발주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재원이 다르더라도 동일예산항목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같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 이상 있으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단일용역으로 통합발주하고 있으므로 연수구 圖과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과업 수행 가능 업체가 두 군데 이상인 용역사업은 분할 발주를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용역 발주 시 실적인정 소홀

기 관 명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연수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실적제한 또는 실적평가 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와 □과는 ☞마을 (마을 조성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과 ☜어반포레스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정량적 평가분야의 수행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실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민자·민간 또는 해외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해서 평가를 해야하는 점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입찰 공고 등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용역 계약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 ㉡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역량 등을 강화하고자 20**년 및 20**년 ㉡마을과 ㉢마을에 ⇔⇔을 운영하는 용역 계획을 각각 수립한 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1. 제한입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등을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상(2021년~2022년 2.1억원 이상)이면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일 경우에만 해당 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고,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㉔과에서는 20**년 및 20**년 ㉔마을과 ㉔마을 ⇔⇔ 운영 용역을 제한입찰로 공고하면서, 제한요령과 맞지 않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2.1억원) 미만이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 아님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및 인천, 서울, 경기도의 지역으로 부당하게 중복하여 제한하는 등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홀하였다.

2.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3절의4 제안서의 평가요령에 따르면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20**년 ㉔마을 ⇔⇔ 운영 용역 및 20**년 ㉔마을 ⇔⇔ 운영 용역 입찰 공고 시 첨부한 제안요청서의 정량적 평가항목은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이며 이 중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평가기준은 [표1]과 같으며, 심사기준은 [표2]와 같다

.

[표1]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연구원	투입인력	절대 평가	3	7명이상	6명	5명	4명	3명이하
					3	2.7	2.4	2.1	1.8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자		3	150점이상	125점이상	100점이상	75점이상	50점미만
					3	2.7	2.4	2.1	1.8

※ 자료출처 : 입찰 공고시 첨부한 제안요청서 발체

[표2]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심사기준

구 분	기 준		계수(점)	비 고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25	※ 관련 분야 지역 계획, 관광, 문화예술, 디자인, 건축, 조경, 도시 계획, 지역 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 해당 분야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사업 또는 (홍보·마케팅, 브랜드관리, 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 계획수립, 마을경영 등) 주민참여형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 또는 (도시형 마을만들기, 지역 스토리텔링 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20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15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 · 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12	

※ 자료출처 : 입찰 공고 시 첨부한 제안요청서 발체

☞과에서는 20**년 ☞마을 ⇄⇄ 운영 용역 및 20**년 ☞마을 ⇄⇄운영 용역

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투찰한 두 업체의 정량적 평가항목 중 하나인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경우 용역 참여기술자의 전공 또는 실적을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제시한 관련 분야 전공에 포함되지 않는 전공까지 폭넓게 인정하거나 해당분야 업무수행기간을 오적용하는 등 평가를 소홀히 하였다.

① 2021년 ☞마을 ⇔⇔ 운영 용역의 경우

개찰 결과 투찰한 업체는 총 세 업체지만, 제안서 평가 위원회에 참석한 업체는 ☞본부와 ☞협회로, 두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점수 재산정 현황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공이 아닌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육학을 폭넓게 인정하여 평가하여 제안서 평가 당시의 점수와 감사일 현재 재산정한 점수가 변동되었지만, 두 업체 모두 0.6점씩 감점되었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20**년 ☞마을 ⇔⇔ 운영 용역의 경우

개찰 결과 투찰한 업체는 총 두 업체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이며 두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점수 재산정 현황은 도시계획, 지역개발,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공이 아닌 철학, 기호학, NGO학을 폭넓게 인정하였고, 주민참여형 관련 업무 수행기간을 오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제안서 평가 당시의 점수와 감사일 현재 재산정한 점수가 변동되었지만, 점수 변동 폭이 협상대상자 순위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주)☞의 경우 참여기술자의 전공 또는 실적 합산 점수가 **점이었지

만, 점수계산방법에 의하면 **점은 75점 이상 또는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이 없어 정량평가 점수로 환산하지 못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미충족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㉔과에서는 20**년 ㉕마을 ⇔⇔ 운영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위원의 개인일정 사유 등으로 평가위원 수가 7인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예비 평가위원 연락 또는 위원회 일정 변경 등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평가위원 최소인원 수인 7인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등 제안서 평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안서 평가 등 계약업무 추진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직원 업무연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공고,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을 14일 이상 하여야 하며, 보상계획 공고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연수구 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편입된 ○○동 **-*번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20**년 *월 *일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였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보상계획 열람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20**년 *월 **일까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田과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간이 끝나기 전인 20**년 *월 *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20**년 *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법」 상의 절차불이행으로 보완 요구받아 수용재결을 취소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기금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와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서에 각각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②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는 6개 기금조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령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연수구 ◎과, ❖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성과분석을 제출하였으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작성하였다. 또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서에 각각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여야나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기금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상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5개 부서

내 용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현금 집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개산금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함에 있어 격려금 현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방침 없이 총 **회, 3,0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금징구영수증을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가. 관계기관 의견

◇과에서는 지급목적(업무추진 노고 격려)을 명시한 지급품의와 사업계획으로 현금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한 직원을 적극 격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적 정서를 고려하여 현금제공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함.

나. 의견에 대한 판단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필요성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작성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집행 할 수 없으며, 한국적 정서로 현금지급이 필요하였다는 의견은 지급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속 직원 격려 목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경비이므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해설집 Ⅲ.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직무활동[별표 1] 해설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따라 외주업체 직원, 공공근로 및 대체근로자 등은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아 격려금품의 지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연수구 □과 등 5개 부서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직원격려 목적 간담회 비용 등 총 ***건, 21,433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특히 □과에서는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않는 희망일자리 근로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공근로 참여자 등에게 직원 격려 목적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가. 관계기관 의견

□과에서는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근로자등 관계자에 대한 식사 제공이 [별표1] 제4호 가목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

자에게 식사 제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 의견에 대한 판단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및 자원활동가는 비상근 직원으로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격려가 필요한 사업추진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서관 보조인력 간담회'는 직원격려를 목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이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공사기간 산정 심의 절차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³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심의위원회의³¹⁾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에는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 제4조에는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하나, 단서 조항으로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건

30)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주청이 위촉한 위원회

31) 지방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광역시에 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광역시에 두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공사” 외 1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대한 산업안전협회 및 건축공간연구원) 협의로 기술심의를 대체하는 등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향후 총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설계공모시 도시관리계획 적합성 검토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업무시설을 불허하고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수립한 “연수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기반시설인 “102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어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과 부속용도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2조에 따라 입안·주민의견 청취·의회 의견청취·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시설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연수구 ΩΩ회관 건립 설계공모(20**.*.**)”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 및 연수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설계지침서를 작

성하였으며,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20**.**.**)를 거치는 등 설계공모 지침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설계공모 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부서)협의 및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계획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 에 따라 이행강제금³²⁾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2)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위반행위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건축물 이외의 위반행위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한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동 **~**번지 외 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도로점용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연수구 ◆과·■과에서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연수구 ■과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와 부담금 및 당해 연도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대장 관리 소홀

가.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지적사항

그러나 연수구 ◆과·■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작물 등 시설물의 관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도로점용허가 대장이 없어 다음 연도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만 검토 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 받은 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부재로 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도로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 사항 관리 소홀

가. 관련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지적사항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는 연수구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온라인시스템으로 민원 접수부터 허가 처리, 점용 내용, 굴착·복구의 착공계·준공계 접수, 2차 복구 비용 산정, 점용 해당 연도 부과할 점용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굴착·복구 후 도로점용이 지속되는 현황 자료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과·■과에 제공하여 도로점용 공작물 등 시설물의 관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도로점용료 **건 3,170,500원(20**년 *건, 97,000원 / 20**년 **건, 1,660,600원 / 20**년 **건, 1,412,900원) 부과 누락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분(20**년 *건 97,000원, 20**년 **건 1,660,600원, 20**년 **건 1,412,900원) 3,170,500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굴착을 수반한 도로점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田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도급금액에 반영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1항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5호, 2021.7.1.)」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적사항

연수구 ☺과, ☼과에서는 ‘* * 마을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차-*권역)공사’, ‘○○동 *-*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하며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개인 부담금을 포함 정산하여 5,837,320원을 과다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5,837,32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인 ‘≡ 도서관 건립공사’ 외 *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품질관리 소홀

가.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³³⁾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33) 품질관리계획 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제2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제4항 [별표 5]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배치, 시험실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지적사항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흙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개 사업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안전관리 소홀

가.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18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지적사항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 중 ‘▲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공사’ 외 *개 사업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고

‘○○역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맞게 품질 시험계획 검토 및 승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측량 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실 외 2개 부서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공공청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4조(측량의 항목 및 기준)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도로공사 및 건축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행하여야 할 측량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2항에는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국토지리정보원)에게 제출’하고, 제18조(공공측량 성과의 심사)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적사항

그러나 연수구에서는 20**년 *월 이후 준공 및 진행 중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외 **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공공측량성과 심사의 행정절차를 미이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였다.

3. 관련부서(비전전략실) 의견

Ⅱ동,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가 아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하였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중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하다고 되어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Ⅱ동, ㉮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서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아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설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건설기술 진흥법」,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공측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4.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판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1항에는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세부 기준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4조(측량의 항목 및 기준)에는 각 공종별(도로공사, 건축공사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의 측량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공공측량의 정의 및 이행에 대한 행정절차(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정의) 제3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측량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으로 정하고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이 아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적용하여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였다 하여 공공측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 할 것임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①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과 해당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관련 조례 정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田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노상 **, 노외 **) **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1. 공영주차장 전용주차구역(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보 소홀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따르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다만, 기축시설은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은 100분의 5로 하며 기축시설은 100분의 2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지적사항

그러나 연수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소에서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이 미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비 소홀

가.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지적사항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확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노상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① 관련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비율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위 법령 등과 부합되도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훈계 요구

제 목 폐기물처리업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이하 “연수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폐기물 중간처분업으로 허가받은 (주)ㄸㄸ을 관리하고 있다.

1. 폐기물 처리실적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9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는 매년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이하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25조제9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또는 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내 폐기물 중간처분업으로 허가받은 (주)ㄸㄸㄸ이 올바르게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0**년에서 20**년까지의 폐기물 중간처분실적을 확인한 결과, 20**년 처분실적은 내용을 미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년과 20**년 처분실적은 허가용량의 ***~***%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연수구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법령위반에 따른 검토와 별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6호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등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에서는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업장³⁴⁾ 등을 지도·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5조(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의 분류)에 따르면 점검기관은 지도·

34)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사무 중 폐기물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표1]과 같이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에 따라 실시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년 2~4회 정기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폐기물처리업 등의 정기 지도·점검 기준

등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 자에 한함)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폐기물자가처리시설설치 사업장, 폐기물 수·출입 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미만)
우수 관리	2	1	1	1
일반 관리	3	2	2	1
중점 관리	4	3	3	2

그러나 연수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중간처분업)을 관리하면서 등급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년에는 미 실시하였고, 20**년과 20**년에는 각 1회 점검하였으나 20**년과 20**년의 지도·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을 확인했을 뿐 허가받은 중간처분업에 적합한 시설 및 이행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행정처분 정보 미통보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정보통보서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20**. *월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였으나, 법 제27조제2항 등에 근거한 행정처분 정보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된 한국환경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미충족에 대한 조치 미흡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제6항에 따른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의하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은 2.-가.-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처분, 보관, 계량, 수집·운반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규칙 제32조에 따른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서 1. 공통기준,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중간처분업으로 허가받은 (주)ㄱㄱ은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 장비 등의 능력을 유지하였으나, 인천시 ㉠과 (現 ㉡과)는 연수구 등 *개 구에 공문을 시행하여 (주)ㄱㄱ 부지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 따른 법원 조정결과, (주)ㄱㄱ이 인천시에게 20**.*.**, 까지 토지 및 건물인도·철거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연수구는 20**.*.**,에 관련 문서를 접수하였다.

이후 20**.*.**, 인천시 ㉡과는 해당부지 공유재산 소송결과에 따른 (주)ㄱㄱ 부지 토지 및 건물 사용허가 종료 내용을 재차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시가 주관한 가운데 20**.*.**,과 20**.*.**, 두차례에 걸쳐 연수구 등 *개 구의 대형폐기물 처리 담당자 회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관내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주)ㄱㄱ이 20**.*.**, 이후 사업장 부지 및 건축물(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분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공유재산 부지 사용 종료일 전 업체에 사전안내를 하거나, 사용 종료일 이후 법령에 따른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훈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관리와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정 조치하시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에서 정한 행정처분사항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시기 바라며,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훈계 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판단기준(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이하 “연수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같은 조례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않으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태료 부과 의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22조(의견청취)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사실

연수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료를 확인한 결과, 연수구는 민원 접수 및 현장순찰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확인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본 부과를 30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건(250,000원)에 대해 각각 5개월, 3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처분하지 않았다.

위 ***건 중 **건은 지방행정○○ Q가 담당하여 처리하면서 사전통지를 30일 ~ 최대 67일 까지 지연하여 통보하거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거친 후 미수납된 건에 대하여 62일 ~ 최대 242일이 지나서야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내부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1,750,000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부과 처분 하지 않았다.

3. 관계기관 의견

연수구는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을 인정하나, 20**.*. **. 이후 무단투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무단투기지도팀을 신설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민원 처리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관리의 업무가 소수의 인원들에게 집중되는 현상 발생하였고, 민원 처리를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상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가 주기적·통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의견에 대한 판단

민원처리 등 여러 상황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가 주기적·통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단투기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 후 과태료 사전통지 또는 부과하기까지 상당한 건수가 지연처리되거나 미부과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본 사항은 20**.*. **월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관리 소홀’로 지적되어 인천광역시 감사관-*** (20**.*. *. *.)호에

따라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훈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지연처리 하거나 미부과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으나 미처분된 무단투기 **건(1,750천원)에 대하여 조속히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무단투기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이하 “연수구”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리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³⁵⁾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 1개월

3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따른 ①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②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구 조례로 제외 대상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③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④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⑥ 그 밖에 구 조례로 정하는 자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상호 또는 소재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관내 인허가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확인한 결과, *개 업소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와 변경 신고, 신고서에 명시한 내용의 이행,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에서는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등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하여 20**년, 20**년도에는 연 1회 미만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년도에는 미실시하여 매년 점검률이 0~4.8% (20**년은 5.3% 추진 중)에 그치는 등 지도점검 이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철저히 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이하 “연수구”라 한다)는 도심 속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 *. *. ~ 20**. *. **, 기간 동안 ‘xx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건설공사를 추진하였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5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1조(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시에는 순환골재등의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르면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³⁶⁾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보고, 검사 등) 및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의 규정에 따라 배출신고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이하 “올바로시스템”³⁷⁾)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xx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공원면적 *,***m²)’을 추진하면서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순환골재 등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하였다.

36) 「인천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임받은 사무 중 순환골재등 사용계획서 접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

37)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2.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소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³⁸⁾(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³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xx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2개년에 걸쳐 추진하면서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기한 내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공사 준공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야 보고·제출하였다.

38)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함

39)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페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페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의무사용량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계획서의 제출 및 사용실적보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등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가 누락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과(이하 “연수구”라 한다)는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⁴⁰⁾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제3항에 따르면 가동개시 신고 또는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배출시설의 가동시작 신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폐

40)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사무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함

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⁴¹⁾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제1항에 따르면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하고,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지도·점검 방법) 제6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10일 이내)에 가동개시신고(가동시작 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한지

41) 인천광역시장이 수입받은 사무 중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

여부와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단, 대기배출시설은 필요시 오염도 검사를 할 수 있다)를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관리하면서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여야 함에도 **개 사업장의 가동개시(가동시작) 수리 후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가동시작) 신고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공급·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관청은 같은 법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거래가격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운영 및 신고내용 조사 규정」 제4조(검증체계의 위탁) 및 제5조(검증체계의 운영)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이하 ‘수탁기관’ 이라 함)에 위탁하고 부동산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규정 제6조(상시 모니터링)에 따라 수탁기관은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신고관청은 같은 규정 제7조(조사 대상) 제3호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한 검증결과 또는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확인결과 중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자로 통보된 **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조사대상 중 미조사 건에 대하여 조속히 정밀조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수과

내 용

「주차장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그 주차장에 대하여 사용검사(유효기간 3년) 및 정기검사(유효기간 2년)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에 따라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수과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시정지시는 하였으나 별도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주차장치 관리인을 미배치 또는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기한이 경과한 **개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에 따른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미가동으로 인하여 주차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식주차장 및 관리인 미 배치, 관리인 교육기한이 경과한 주차장의 소유주 등에게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조치 하시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식주차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課과

내 용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 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2005. 01.)에서는 위반건축물의 시정 명령 횟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구 조례에서는 신규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동 *****번지 등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용역 감독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㉔과

내 용

연수구 ㉔과에서는 □□마을과 인근지역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동 **-*번지 일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및 창작플랫폼 건립공사를 추진하였다

1. 1. 예정가격 결정기준 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이와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수구 ㉔과에서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및 창작플랫폼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 작성 시 철거공사 등 *개 공종은 「지방계약법시

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건설공사표준품셈으로 작성하여야 함에도, 제4호 시공업체 견적가격으로 작성함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미준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설계용역 시 특정규격 및 제품 선정기준 검토 소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호에 따르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나 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규격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 시에는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사 구조 설계 도서에는 기초공사 시 퍼즐쏘일 공법이라는 특허공법을 설계반영하여 입찰에 부치면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기술사용협약서 등 검토없이 설계에 반영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건축공사 설계용역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특허공법 선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확인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수과

내 용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및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고시 제2021-451호, 시행일 2022. 1. 30.)에 따르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으로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연면적 500㎡ 이상 건축허가 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신축, 별동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일 경우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표]와 같이 설계기준을 차등적용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허가 시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와 사용승인 시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를 설계자에게 제출받아 적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계기준 차등적용

구분	주 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 이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 참고: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그러나 연수구 관에서는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일 (2022.1.30.) 이후 건축허가 처리한 *건에 대해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및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서식)”가 미제출 되었음에도 제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건축허가 시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및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 제출확인 등 검토 후 건축허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공원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 ♠과에서는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⁴²⁾」를 제정하여 해당 공원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하는 등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에 따르면 공원관리청⁴³⁾과 공원수탁관리자⁴⁴⁾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및 공원관리시설 등의 공원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019.12.30.), 일부개정(2020.5.15., 2020.12.28.)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공원녹지조례’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8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9조(허가의 취소 등)에서는 사용 허가 받은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금액·환불·면제·감면⁴⁵⁾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별표2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사용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사용료 및 공원 이용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재료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조례 [별표2]의 4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운동장 등 공원시설과 야간조경시설·야영장별 사용료는 규모, 용량, 규격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해 공원관리를 위임받은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제1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하 ‘단체 위임사무’라고 함)를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5조(국가사무의 위임)에 따르면 국가사무 중 시·도지사 및 시장·

4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2. 65세이상인자 및 만 19세 미만인 자는 운동시설(운동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에 한해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공원시설 사용 시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같은 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에 따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에 조례제정 범위는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⁴⁶⁾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관내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주제공원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수구에서는 공원 내 공원시설의 운동시설에 대해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수구 ♠과에서는 공원내 운동시설에 대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에 제정하여 20**년 현재 감사일까지 아래[표]와 같이 「공원녹지 조례」와 다르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도시공원 시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지 않고 있다.

46) ① [대법원, 99추85, 2005.30.]공원조례증개정조례안무효: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② [대법원, 95추32, 1995.12.22.]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고 할 것이다.

【표】 공원시설 사용료 市 조례와 區 조례 비교

(단위: 원)

종별	市 조례					區 조례				
	사용기준		금액		조명 등	사용기준		금액		조명 등
			체 육경기	체육경기외						
운동장 (축구장)	2시간	평 일	30,000~ 50,000	60,000~ 100,000	시간당 11,000~ 20,000	2시간	평 일	30,000	시간당 11,000	
		휴 일	50,000~ 80,000	120,000~ 200,000			휴 일	50,000		
풋살장	2시간	평 일	15,000		사용료의 100분의50	2시간	15,000			
		휴 일	25,000							
테니스장	2시간		5,000		사용료의 100분의50	2시간	기본	연수구민할인		
								10,000		5,000
	월 회원	개 인	30,000		평일사용	월 회비(1인)	30,000	15,000		
	월강습	개 인	60,000		평일강습, 재 료비별도	월 회비(단체)	20,000	10,000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별표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공원 내 운동시설 사용료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기준에 따라 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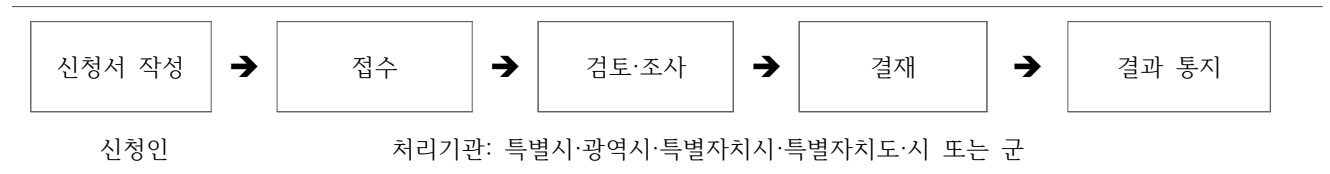
연수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개의 도시공원과 **개의 녹지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1. 공원·녹지 점용허가 지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공원녹지 관리청의 장에게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4조(허가신청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공원·녹지 점용허가의 처리절차는 [그림]과 같으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는 점용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는 점용 시작일 이전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림】 공원녹지 점용허가 처리절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재구성

그러나 연수구는 최근 3년간(20**년~20**년) **건의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변경)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을 점용 시작일 이후 점용허가 한 사실이 있다.

2. 공원·녹지 점용료 부과·징수 지연

공원녹지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르면 법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4조(점용료)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료는 허가할 때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최근 3년간(20**년~20**년) **건의 공원·녹지에 대한 점용(연장)허가를 처리하면서 **건의 점용허가 건에 대해 점용료 납부를 허가할 때 일괄 징수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부과·징수하였다.

3. 공원·녹지 점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미확인

공원녹지법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 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는 바로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관리청의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청의 장은 점용 또는 사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는 **건의 점용 기간 만료에 따른 점용물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현장 확인 출장복명을 하지 않는 등 점용 전·후 대상지 원상복구에 관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업무 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 ▲과(이하 ‘연수구’라고 한다)는 관내 청량산을 비롯한 *개의 주요 산과 428ha 산림 및 가로수 41,130주 등 도시숲의 조성·관리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숲길 조성·관리 사업,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 병해충 방제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따르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산림사업은 ① 제1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⁴⁷⁾,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③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으면 7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⁴⁸⁾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에 해당할 때는 승인서(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정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산림기술법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제5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따라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

- 4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23.9.26이후 100만제곱미터) 또는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라.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이라 한다)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48)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하면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표 5의 항목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 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는 최근 3년간(20**년~20**년) ‘20**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사업’ 등 **개의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통보하지 않고, **개 사업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조경석 반입에 따른 사전 승인 및 검수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연수구 ▲과에서는 조경석(가공석 포함)을 반입하여 산림사업 및 조경사업을 시행하였다.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의하면 ‘조경석’은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 납품하여야 하며 석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석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납품자는 조경석에 대한 자재공급원 신고서를 제품의 실물사진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수요기관은 사전 승인 후 자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납품자는 검사를 요청할 때에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서 정한 토석채취(채석)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수요기관명, 공사명, 거래기간과 거래량 등 표기)와 품질시험검사성적서⁴⁹⁾, 토석채취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및 「가공·변형된 석면 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허용기준」

49)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압축강도, 흡수율, 표건비중, 석면함유 시험결과

(환경부고시 제2020-266호, 2020. 12. 28. 시행.) 에 따라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납품 후 석면 함유가 발견되어 수요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석면 함유 조경석 전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수구 ▲과에서는 조경석 반입시 납품자로부터 사전승인서를 제출 받지 않고 공사현장에 조경석을 설치하고 납품검사 시 원산지증명서 및 품질시험검 사성적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 준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조경석 반입시 자재공급원 신고서를 받아 사전승인 후 현장에 반입되도록 조치하고 납품검사시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수과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라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말소등록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자동차의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라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신고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1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인천시 ☒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고자동차 수출의 어려움에 따라 중고차 수출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 제외 기간을 수출말소 신고 기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연수구 수과에서는 자동차 수출을 위하여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고 만료일이 55일 이상 경과 되어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50만원)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상당기간 경과하여 과태료를 부과(20**,**,**)하는 등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자동차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수과

내 용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로부터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등)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반납 지연 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구청장은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수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나, 관계 법규를 위반하고 반납하지 아니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반납 촉구 또는 과태

료 부과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과태료를 부과(20**.**.**, 20**.**.**)하는 등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자동차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 요구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관련 규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3조(검사 등), 제44조(과태료)는 (시행 2022.8.4.)[제18822호, 2022.2.3.]로 일부개정⁵⁰⁾되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50) 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8.4.] [제18822호, 2022.2.3., 일부개정]

- 제13조 검사 등 제5항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
-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 ‘제13조 5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13조 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제44조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의 신청 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의거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10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정기검사를 지연하여 받은 *건에 대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상당기간 경과하여 부과하였다.

또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 받을 것을 최고 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정기검사 명령(20**,**,**)을 이행하였다.

2.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상당기간 경과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田과

내 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7항에 따라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허가기준) 별표1에서 차고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법정 대수 초과분만을 말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또한 최저 보유 차고 면적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1대당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허가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1대)인 경우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시 또는 군의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를 받은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에 따라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구 ~~법~~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차고지 임대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하여 변경 허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경과하여 계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시기를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청문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소매인이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3(청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에 따르면 청문통지기간 산정 시 송달

시기는 최소한 청문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⁵¹⁾(도달주의)하고, 공시송달은 연락처를 찾기 위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도 통상의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청문 일자는 공고 기간을 미포함하여 의견 준비기간 10일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및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와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⁵²⁾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바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구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건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서 *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문 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우편이 도달되어 의견제출 준비기간이 충분하도록 고려하여 송달 시기를 정하여야 하나, 청문실시통지 공문을 청문일 10~12일 전에 결재 후 송달하여 송달소요기간(2~3일)을 고려하면 의견 준비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않았다.

51) 예시) 우편송달의 경우, 송달소요기간이 4일이고 1일자로 발송한다면

- 도달일 5일, 청문일은 의견준비기간 10일(6~15일) 경과 후, 16일 이후가 됨

5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법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 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그리고 *건의 청문에 대해서는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일 부서의 팀장을 청문 주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건의 청문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열람·확인 장소 및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 당사자 등에게 열람·확인을 하여야 하나, 별도의 통지 없이 당사자 등이 아닌 처분 담당자가 날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준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의 요구

제 목 물품구매 계약 등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연수구 ■과, ◆과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도심, ○○동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및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연간단가)를 시행하였다.

1. 물품 구매 계약 업무처리 소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 ◆과에서는 20**년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연간단가) 외 *건의 공사에서 등기구 외 **건, 총 157,655천원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지 않고, 소요자재의 수요 예측 어려움, 자재 창고 부재(❖과)로 인한 보관의 어려움과 다양한 종류의 등기구·등주로 인해 지급자재로 보유하기 어려운 사유로 사급자재로 설계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고재처리 관련 예정가격 작성 미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원가 중 재료비는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부대비용의 처리가 있으며,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연수구 ■과, ❖과에서는 20**년 **월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한 사업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나, *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2,700천원을 재료비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서 공제함으로써 기타경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와 연동되어 예정금액(도급금액)이 감액되도록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의]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 직무 교육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연수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구 분	제 목	관련부서
수범사례 1	국내 최초 임상시험수행 의료기관 개설	보건행정과
수범사례 2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 추진	송도정책과
수범사례 3	행복한 동행, 원스톱 상담서비스 「연수복지상담 센터 운영」	복지정책과
수범사례 4	말소(무판)차량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주민감사단 모집 운영	차량민원과
수범사례 5	청년들의 진짜 전세 찾기 프로그램, MZ하우스 중개업소 운영	토지정보과
수범사례 6	현수막 지정게시대 드론(Drone) 활용 안전점검	도시계획과
수범사례 7	재활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송도건강생활 지원센터
수범사례 8	이·미용업소&목욕장업소 대상 「함께가치 착한업소」 운영	위생정책과
수범사례 9	기억울타리 치매안심마을 조성	건강증진과
수범사례 10	안골마을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도시주택과
수범사례 11	APT 커뮤니티시설 생활방역체계 구축	감염병관리과

□ 추진배경(목적)

- (주)다원메닥스는 산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붕소중성자 포획치료(BNCT) 방사선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해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회사 소속의 의사가 의원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상 「사무장병원⁵³⁾」에 해당될 수 있어 의원 개설신고 수리에 어려움을 겪음

□ 추진사항

- 감사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통한 다부처(보건소, 區 감사실, 市 감사관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적극 협업검토 및 의원 개설 신고의 근거 마련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통해 의원 개설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및 신고 수리 가능 여부 회신
 - ☞ 영리추구 및 부정수급 등의 목적이 아니면서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임상시험 수행을 목적일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한 것을 수리할 수 있음
 - '21. 4월 ~ 7월 보건복지부 질의 및 회신
 - '21. 8월 ~ 9월 보건소 및 (주) 다원메닥스 수회차 진행사항 논의
 - '21. 9월 연수구 고문변호사 질의
 - '21. 9월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제출
 - '21. 10월 감사원 감사관, 보건소 담당자의 (주) 다원메닥스 현장실사
 - '21. 12월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회신
 - '21. 12. 31 비엔씨티(BNCT)의원 개설신고 처리

53)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시설을 갖추어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질적 주체로 영리를 취하는 형태

□ 사업효과

- 국내 최초 대형 장치형 방사선 치료기기 임상시험수행 전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통한 말기암환자 치료기기 실용화를 위한 발판 마련
- 고가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합리적 목적성 및
행정 효율성이 부합하도록 적극행정을 통하여 국가연구과제 수행 및
의료환경 경쟁력 강화
-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관행적·소극적 업무를 탈피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공 이익창출을 위한 민·관 소통의 적극행정 실현

□ 관련사진

<p>경기일보 2022년 1월 6일 목요일 012면 인천</p> <p>민·관 소통 행정 펼친 연수구 임상시험수행 의료기관 개설</p> <p>관행 탈피 등 '우수사례'로 평가 대형 장치방사선기기 시험 추진</p> <p>인천 연수구가 적극행정으로 전국 최초의 대형 장치형방사선 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 의료기관 개설을 이끌어 냈다.</p> <p>구는 최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전국 최초의 대형 장치형방사선 치료기기 임상시험수행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관련 행정처리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전컨설팅감사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 추진, 국가의료환경 경쟁력의 강화, 관행·소극적 업무의 탈피 등에서 민·관 소통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p> <p>앞서 유다원메디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뽑힌 뒤 국비 88억원을 포함한 127억원의 사업비로 말기 암환자 대상의 붕소중성자포획 수술을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대형 장치형방</p> <p>사선 치료기기를 개발했다. 다원메디스는 앞으로 4년간 새롭게 개발한 대형 장치형방사선 치료기기의 임상시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차폐시설 등을 갖춘 별도의 의료기관부터 개설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다원메디스는 송도국제도시 EBC센터에 임상시험을 추진하기 위한 BNCT위원의 개성을 준비하여 지난해 관련 신고서를 구에 제출했다.</p> <p>구는 이번 다원메디스의 BNCT위원 개설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두고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은 임상시험 목적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구에 답변했다. 이를 토대로 구는 최근 임상시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BNCT위원의 개설 신고를 수리했다.</p> <p>구 관계자는 "관행·소극적 업무를 탈피한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민·관 소통의 적극행정을 실현했다"고 했다.</p> <p>김민기차</p>	<p>경인일보 2022년 1월 6일 목요일 010면 지9</p> <p>연수구 적극 행정 빛난 임상시험 병원 개설</p> <p>‘사무장병원’ 걸림돌 다원메디스 붕소중성자포획 BNCT T-Some Neutron Capture Therapy 를 위한 방사선치료기기 개발하고자 임상시험 병원을 만들려는 것이었다.</p> <p>다원메디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 정돼 말기암이 붕소를 포획하는 특징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암세 포에 붕소를 투입한 후 입자가속기를 통 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쏘아낸, 붕소가 중성자와 반응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 사선 BNCT에서 임상시험을 위한 병원을 구립에 짓자고 연수구보건소에 신고 했다.</p> <p>이 업체는 “붕소중성자포획 BNCT T-Some Neutron Capture Therapy 를 위한 방사선치료기기 개발하고자 임상시험 병원을 만들려는 것이었다.</p> <p>다원메디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선 정돼 말기암이 붕소를 포획하는 특징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암세 포에 붕소를 투입한 후 입자가속기를 통 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쏘아낸, 붕소가 중성자와 반응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 사선 BNCT에서 임상시험을 위한 병원을 구립에 짓자고 연수구보건소에 신고 했다.</p> <p>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임상시험을 위해 임시적으로 의료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사전컨설팅감사를 했다”며 “사전컨설팅 당 제도를 활용에 적극 행정을 펼친 사 례”라고 말했다.</p> <p>/김수정기자 kj888@yeongin.com</p>
---	--

수범사례 2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 추진

□ 추진배경(목적)

- 옥외광고물법(약칭)은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가지고 있어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 및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크기, 설치위치, 수량 등)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위임체계로 인해 일반 주민은 물론 옥외광고사업자 및 담당 공무원들도 정확한 규정 확인이 어려움
- 따라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의도치 않은 불법옥외광고물 다수 발생함
- 기존 사후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옥외광고물법 규정 안내 및 제도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추진내용

- 1)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한 ‘연수간판여지도’ 서비스 시행(인천시 최초)
 - 사업명 : GIS 기반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검색 서비스 개발
 - 사업내용
 - 복잡한 옥외광고물 표시규정을 주소지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GIS 기반 검색 서비스 ‘연수간판여지도’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 2023. 1월 ~ 6월
 - 사업비 : 비예산 ※ 인천시 GIS 플랫폼 활용 및 DB 자체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
- 2) 불법옥외광고물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영상 콘텐츠 제작
 - 사업명 : ‘착한 간판 달기’ 릴레이 영상 캠페인 추진
 -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법 규정 준수 업소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 영상 제작 : 10편
 -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 및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홍보
 - 사업기간 : 2023. 3월 ~ 8월
 - 사업비 : 비예산 ※ 담당자 자체제작을 통한 예산 절감

□ 사업효과

- 복잡한 옥외광고물법 체계로 인해 업소주들이 간판 설치 과정에서 겪는 주민불편사항 개선
- 신속하고 간편한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안내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
-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옥외광고물 표시규정 안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고취하고 규정을 준수한 '착한간판'을 설치하도록 독려

□ 관련사진(보도자료)

<p>인천일보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012면 메트로</p> <h3>옥외광고물 규정 간편 검색 '연수간판여지도' 서비스</h3> <p>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복잡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사업자도 정확한 설치 규정을 확인하 서비스 시작됐다. 구 홈페이지에서 '연수간판여지도'를 검색해 설치 규정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IS (지리정보체계) 기반 검색 시스템 '연수간판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건물 밖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간판과 현수막, 스크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은 ▲시도조례 ▲고시 등 단 계로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 주민은 물론</p> <p>옥외광고사업자도 정확한 설치 규정을 확인하 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천시 옥외광고 물 특정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별로 각각 다 른 설치 규정을 적용받는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정확한 설치 규정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담당 공 무원에게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는 올 1월부터 5 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 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 홈페이지에서 '연수간판여지도'를 검색해 접속하면 주소지 검색을 통해 설치 규정을 간편 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 송도관리단 관계자는 "연수간판여지도서 서비스를 통해 설치 규정을 속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사례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p> <p>최종지 park2@incheonilbo.com</p>	<p>기호일보 2023-06-24</p> <h3>인천시 연수구, 민·관 합동 캠페인 영상 콘텐츠 '착한 간판' 시리즈 제작 화제</h3> <p>[한동식] 인천시 연수구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과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영상 콘텐츠 '착한 간판' 시리즈를 제작해 화제다.</p>  <p>24일 구에 따르면 별도 예산 투입 없이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제작한 '착한 간판' 콘텐츠는 규정을 잘 준수해 설치한 지역 내 간판 설치 사례를 광고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정보와 제도들을 소개했다. 최근 유행에 맞춘 1분 미만 숏폼 영상 편집으로 어렵고 지루한 옥외광고물법(약칭) 규정들을 빠른 리듬으로 익숙스럽게 풀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 송도관리단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은 대표적인 규제 중심의 법령이면서도 그 위임체계가 매우 복잡하 게 구성되어 익숙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간판 허가 절차가 막대하고 불관하게 느끼게 한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콘텐츠 제작 동기를 말했다. 한편 총 10편으로 제작한 '착한 간판' 시리즈는 연수구 유튜브 채널 소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동식 기자 dsham@incheonilbo.com</p> <p>기호일보 - 아침을 깨는 신문, K-HOLEBO</p>
연수간판여지도	착한간판

수범사례 3 행복한 동행 원스톱 상담서비스 「연수복지상담 센터 운영」

□ 추진배경(목적)

○ 일원화 된 상담창구로 구민 편의증대

- 사회복지 정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점점 늘어나지만 전달체계 역시 복잡해짐에 따라 복지상담 창구를 일원화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아동·저소득 계층임을 고려하여 통합 복지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로 주민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연수복지상담센터’ 안내데스크 및 상담실 조성(구청 6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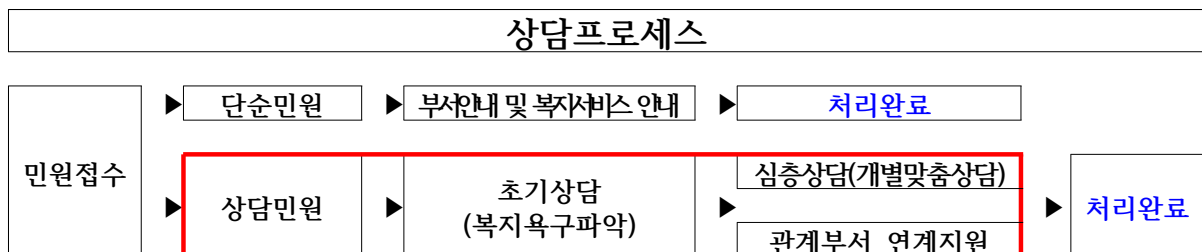
- 복지부서 5개(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6층으로 통합 재배치

○ 사회복지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단순민원처리 뿐 아니라 세부 분야별, 단계별,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열린 복지상담창구로 운영

○ 민원인 초기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욕구 파악 후 즉결처리 또는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관련 복지부서 협조(연계)를 통한 민원처리 실시

○ 개인별 맞춤상담 및 이력관리를 통하여 최신 복지정보 제공, 연계사업 등 지속 안내

○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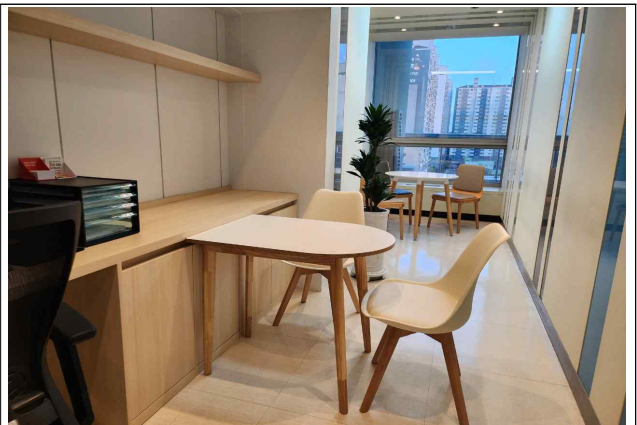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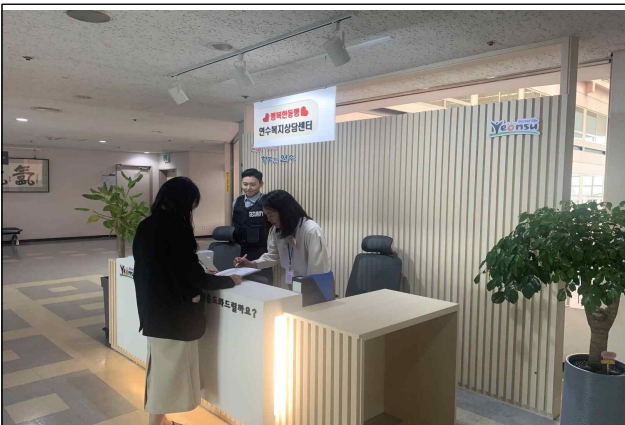
□ 추진사항

- 2023. 7. 연수복지상담센터 조성계획 수립 및 복지부서(5개) 청사 재배치
- 2023. 8. 사회복지직 전담(1명) 및 청사방호 인력(1명) 배치, 상담센터 (안내데스크 및 상담실) 설치
- 2023. 8. 27. 연수복지상담 센터 개소 및 운영 실시

□ 사업효과

-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별 복지상담의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여 행정 만족도 제고
- 주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원하는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상담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 증대

□ 관련사진



상담센터 안내데스크 및 상담실



보도자료(신문 및 NIB 방송 등)

수범사례 4 말소(무판)차량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주민감시단 모집 운영

□ 추진배경

- 구 송도유원지에 위치한 중고차수출단지 인근에서 말소(무판)차량의 불법주정차, 무단방치, 불법운행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움
- 생활권 내에서 자행되는 위해 요인을 주민 스스로 감시하고 신고하여 행정력의 한계 등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말소(무판)차량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주민감시단을 모집 운영함

□ 사업개요

- 모집지역 : 중고차수출단지 인근 동(옥련1,2동 동춘1동)
- 모집대상 : 주민, 자생단체원, 상가연합회원 등
- 활동사항 : 주요 불법행위(지역)에 따른 신고

지역구분	불법행위	처리부서(기관)	연락처	비고
간선도로 (황색선 구간)	불법주정차	차량민원과	032-749-8790	
주택가 이면도로(흰색선 구간) 및 사유지	무단방치	차량민원과	032-749-8763	
노상주차장 (길가 주차장)	목적 외 이용	교통행정과	032-749-8753	
노외 공영주차장	목적 외 이용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032-830-8054 032-830-8073	
위조번호판 부착 도로주행	불법운행	경찰서	112	

※ 모집 현황

구분	계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인원수	총 85명	30명	31명	24명

□ 추진사항

- 2023년 4 ~ 5월 : 주민감시단 모집 및 구성
- 2023년 7월 : 말소(무판)차량 불법행위 근절, 주민감시단 캠페인 실시
 - 총 25명 참여 / 중고자동차 수출매매상 30개소 방문 계도
- 2023년 8월 : 주민감시단 동별 순회 교육 추진 (3개동 총 85명)
- 2023년 9월 : 말소(무판)차량 불법행위 근절, 민.관 합동캠페인 실시
 - 총 100여명 참여 / 견인 7대/ 이동제한장치 설치 9대 / 계도장 부착 7대

□ 사업효과

- 말소(무판)차량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통한 부족한 행정력 보완 및 효과적인 단속을 통한 경각심의 고취로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

□ 관련사진



수범사례 5 청년들의 진짜 전세 찾기 프로젝트, MZ하우스 중개업소 운영

□ 추진배경(목적)

- ✓ **강통전세로 인한 2030 청년피해 사회적 문제 대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400억대
 - 2022년 상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역대 최대(전국 4,279억원)
 - 주택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피해 다수 차지
-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2022.5.)**
 - 청년에게 주거·일자·교육 등 맞춤형 지원
- ➔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바탕으로 사회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월 ~ 지속
- 사업대상 : 연수구 관내 주거 또는 주거를 희망하는 청년
- 사업내용

중개업소 + 자문단 + 연수구청 핫라인 구축

MZ하우스	안심거래 자문단	연 수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강통전세 미 취급 ✓ (부득이 취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 및 권리관계 必 안내 - 전세금 보증보험 안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관련 법률자문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계약 체결 전·후 발생하는 분쟁 상담 - 계약관련 구청 민원 자문 등 ✓ 소송대응을 위한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Z하우스 지정 및 교육 ✓ MZ하우스 대외홍보 실시 ✓ MZ하우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사항(실적)

- ① **강통전세 해결 방안 간담회**
 - ☑ 일시 : 2022.8.1.
 - ☑ 내용 : 연수구 강통전세 실태 및 근절방안 모색
- ②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통전세 예방 및 MZ하우스 업무 협의**
 - ☑ 일시 : 2022.9.7.
 - ☑ 내용 : MZ하우스 운영 방안 협의
- ③ **MZ하우스 참여업소 모집 및 안심거래 자문단 구성**
 - ☑ 일시 : 2022.9.19. ~ 9.30.
 - ☑ 결과
 - 220개소 지원, **MZ하우스 172개소 선정**
 - **안심거래 자문단 5인 구성**(변호사1+평가사1+법무사1+세무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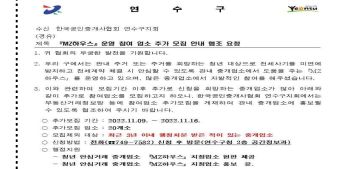
④ MZ하우스 및 청년안심거래 자문단 발대식

- ☑ 일시 : 2022.10.31.
- ☑ 내용
 - MZ하우스 시책 발표
 - MZ하우스 지정서 및 안심거래 자문단 위촉장 수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지회 업무협약



⑤ MZ하우스 추가업소 모집

- ☑ 일시 : 2022.11.9. ~ 11.16.
- ☑ 결과
 - 20개소 추가모집, **총 MZ하우스 193개소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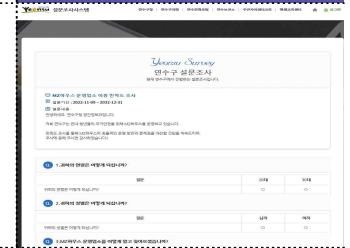
⑥ MZ하우스 지정업소 홍보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 인천시 **청년정책 포털 사이트** 내 'MZ하우스' 운영 **홍보**
 - 연수구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 게재(22.12월호, 23.2·3월호)
 - 연수구 **블로그** 홍보 및 **SNS** 등
 - 관내 9개 대학교 내 'MZ하우스 홍보 안내문 배포'
 - 연수구 주민생활편리지도 '백문이불여일지도' 콘텐츠 **제작**



⑦ MZ하우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 MZ하우스 이용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의견 수렴
 - MZ하우스 이용자 중 **약 90% 이상 만족**



□ 사업효과

지자체 노력도

- **사회문제 → 지역사회 소통 → 시책발굴 → 해결**
 -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이상적인 정책방향 제시**
- **2022년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우수사례 연수구 대표 선정**
 - 2022년 지체 혁신평가 기관 대표 혁신사례 '우수' 선정
- **2022년 인천시 군구 행정 실적 평가 분야별 우수·특수 사례 1위 선정**
 - '주택 및 주거 관련 정책 우수·특수사례' 연수구 1위 선정

확산 가능성

- **시행초기부터 빠른 확산 분위기 및 효과 창출**
 - 초기 172개소에서 시행 1개월 만에 **193개소 확대**
 - 인천시 **최초** 강통전세 근절에 선두 역할 기여
 - MZ하우스 웹맵, 블로그, 신문보도, 관내 대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노력**

□ 관련사진

<h3>SNS 홍보</h3> <p>[연수소식] 연수구, 'MZ하우스' 운영 참여 증개업소 모집</p>  <p>연수구, 'MZ하우스' 운영 참여 증개업소 모집</p> <p>▲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위험 완화 정책 관·철세 착수하는 프로젝트 ▲ 관·철세사업기 피해 막연해 방지...연수구 연방 부처 및 홍보</p> <p>연수구는 오는 30일까지 청년들이 전·월세계약 체결 시 안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년 안심거래 증개업소 'MZ하우스' 운영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p>	<h3>인천투데이(2022.9.20.)</h3> <h2>인천투데이</h2> <p>뉴스 오마이뉴스 기획 문화 포토 영상 더보기</p> <p>연수구, 청년 강릉전세 피해예방 증개업소 모집</p> <p>▲ 연수구 기자 © 일력 2022.09.20 15:54 한빛광주</p> <p> 안심거래 증개업소 'MZ 하우스' 모집</p> <p>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인천시 연수구청장 이재호와 '강릉전세'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Z하우스' 운영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p> <p>'MZ'는 MZ세대의 머릿말로,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대한민국 신조어이다.</p> <p>'MZ하우스'는 연수구가 인천시 최초로 만든 청년(M) 중 대생 안심거래 증개업소 지정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증개업소를 MZ하우스로 지정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시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p> 	<h3>MZ하우스 현판</h3> <p>연수구, 'MZ하우스' 운영 참여 증개업소 모집</p> <p>'MZ하우스'란? 강릉전세 미 취급 또는 부당이 취급 시 선순환 권리관계 등 필수 안내하는 증개업소</p> <p>강릉전세 No! 안심전세 Yes! 전세사기 No! 주거안정 Yes!</p> <p>우리 업소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정책에 발맞춰 연수구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업소입니다.</p> <p>인천광역시 연수구</p>																								
<h3>MZ하우스 발대식</h3> 	<h3>혁신평가 선정 공문</h3> <p>발급: 연수구 행정안전과</p> <p>수신: 수신자 참조 (결구)</p> <p>제목: 2022년 혁신 우수부서 선정 결과 알림</p> <p>1. 기획예산과~3942(2022. 12. 21.)호와 관련됩니다.</p> <p>2. 공직 내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 추진실적 평가, 「2022년 연수구 혁신 우수부서 평가」 결과를 알리고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수부서에서는 포상금 수령 절차를 2022. 12. 22.(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1위</th> <th>2위</th> <th>3위(공동)</th> </tr> </thead> <tbody> <tr> <td>부 서 명</td> <td>관리정보과</td> <td>위생정책과</td> <td>민자리정계과</td> </tr> <tr> <td>포 상 금</td> <td>500만원</td> <td>400만원</td> <td>150만원</td> </tr> </tbody> </table> <p>붙임 1. 2022년 혁신 우수부서 평가 선정 결과 보고 1부. 2. 2022년 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세부 배정표 1부, 끝.</p> <p>연 수 구</p> <p>주장: 고, 도</p> <p>주무관: 연수구 행정안전과</p>	구 분	1위	2위	3위(공동)	부 서 명	관리정보과	위생정책과	민자리정계과	포 상 금	500만원	400만원	150만원	<h3>군·구 행정평가 선정 공문</h3> <p>발급: 연수구 행정안전과</p> <p>수신: 수신자 참조 (결구)</p> <p>제목: 2022년도(실적기준) 군·구 행정 실적 종합 평가 결과 알림</p> <p>1. 시·자치행정과~1902(2023. 2. 10.)호와 관련됩니다.</p> <p>2. 2022년도(실적기준) 군·구 행정 실적 종합 평가 결과를 알리고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아울러, 평가 실적 종합부서에서는 부인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 구에 불리한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평가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또한, 인천티브(포상금, 성과인센티브) 해당 부서에서는 기간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시책 사업 명 / 내용</th> <th>담당부서</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포 상 (2022년 우수·특수 사업 1위 업장)</td> <td>「유망 및 우수 2022년 우수·특수사업」 선정부서 전차 간선 52기 MZ하우스로 밀착하는 집사진 프로젝트</td> <td>공간정보과</td> <td>【붙임】 공직로서 등 격을 <제출기간> 2023. 2. 15.(수)</td> </tr> <tr> <td>상시인센티브 (특별추진사업)</td> <td>우수기관 인천티브(80만환)</td> <td>연 수 구</td> <td>【붙임】 사업계획서(제출서식) <제출기간> 2023. 2. 20.(금)</td> </tr> </tbody> </table> <p>붙임 1. 2022년 실적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보고 1부. 2. 2022년 실적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결과보고 1부. 3. 공직로서 등 격증서(제출서식) 1부. 4. 사업계획서(제출서식) 1부, 끝.</p>	구 분	시책 사업 명 / 내용	담당부서	비 고	포 상 (2022년 우수·특수 사업 1위 업장)	「유망 및 우수 2022년 우수·특수사업」 선정부서 전차 간선 52기 MZ하우스로 밀착하는 집사진 프로젝트	공간정보과	【붙임】 공직로서 등 격을 <제출기간> 2023. 2. 15.(수)	상시인센티브 (특별추진사업)	우수기관 인천티브(80만환)	연 수 구	【붙임】 사업계획서(제출서식) <제출기간> 2023. 2. 20.(금)
구 분	1위	2위	3위(공동)																							
부 서 명	관리정보과	위생정책과	민자리정계과																							
포 상 금	500만원	400만원	150만원																							
구 분	시책 사업 명 / 내용	담당부서	비 고																							
포 상 (2022년 우수·특수 사업 1위 업장)	「유망 및 우수 2022년 우수·특수사업」 선정부서 전차 간선 52기 MZ하우스로 밀착하는 집사진 프로젝트	공간정보과	【붙임】 공직로서 등 격을 <제출기간> 2023. 2. 15.(수)																							
상시인센티브 (특별추진사업)	우수기관 인천티브(80만환)	연 수 구	【붙임】 사업계획서(제출서식) <제출기간> 2023. 2. 20.(금)																							
<h3>홈페이지 홍보</h3> <p>연수구 홈페이지</p> <p>분류별 정보</p> <p>'MZ하우스' 지정업소</p> <p>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2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3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4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5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6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7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8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1.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2.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3.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4.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5.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6.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7.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8.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99.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p>100. 운영 정보 운영대상 지정업소 지정업소</p>	<h3>MZ하우스 홍보전단지</h3> <p>청년 안심거래 부동산 증개업소</p> <h2>'MZ하우스'</h2> <p>'MZ하우스'란? 강릉전세 미 취급 또는 부당이 취급 시 선순환 권리관계 등 필수 안내하는 증개업소</p> <p>강릉전세 OUT! 주거안정 YES! 전세사기 STOP! 안심전세 YES!</p> <p>우리 연수구는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정책에 발맞춰 안전한 주거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p> <p>MZ하우스는 어디에 있나요?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가능합니다.</p> <p>HUG 안심전세 App 전세사기 사 해방을 위해 주요 전세집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p> <p>인천광역시 연수구</p>	<h3>인천투데이(2022.11.1.)</h3> <h2>인천투데이</h2> <p>뉴스 오마이뉴스 기획 문화 포토 영상 더보기</p> <p>연수구, '강릉전세' 차단 청사진 하우스 프로젝트 운영</p> <p>▲ 연수구 기자 © 일력 2022.11.01 14:28 한빛광주</p> <p>MZ하우스, 구내 부동산증개업소 172개 참여 법률가 등 청년 안심거래 지원 자문단 운영</p> <p>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인천시 연수구청장 이재호와 '강릉전세'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Z하우스' 운영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p> <p>'MZ'는 MZ세대의 머릿말로,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대한민국 신조어이다.</p> <p>'MZ하우스'는 연수구가 인천시 최초로 만든 청년(M) 중 대생 안심거래 증개업소 지정 사업이다. 구는 이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증개업소를 MZ하우스로 지정해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시 안심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p> 																								

☐ 추진배경(목적)

- 드론 활용을 통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높이 7m) 상단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현장근로자 안전확보 및 게시대 점검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 대 상: 연수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6단) 53개소
- 사 업 비: 비예산
- 사업기간: 2023. 1월~12월(분기별)
- 사업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높이 7m) 상단부 드론 활용 안전점검
 - 드론보유 기관과의 협업 실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추진사항

- 2023. 1~10월: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1~3분기)

☐ 사업효과

- 드론 활용을 통해 상단부 높이 7m의 지정게시대 점검 시 현장근로자 안전확보 및 효율적인 안전점검 수행
- 기존 차량을 이용한 안전점검 시의 도로 교통방해 요인 해소

☐ 관련사진



드론을 활용한 상단부 점검수행 현장사진



드론을 활용한 지정게시대 상단부 사각지대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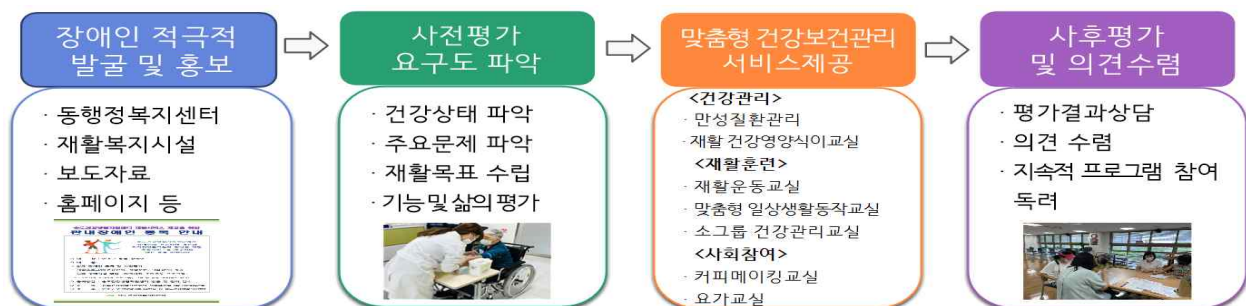
□ 추진배경(목적)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체인구의 5.09%, 연수구 장애인 전체인구의 3.65%, 연수구 장애인 ('21년) 14,022명, ('22년) 14,070명 ('23년 9월) 14,154명으로 지속적 증가
- 건강 취약계층은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환경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이차적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필요
- ⇒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사전평가 및 요구도 파악,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 및 참여 유도로 지속적 관리체계 필요
- ⇒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개발 및 발굴, 연계하여 주민 밀착형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지역주민,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등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추진전략
 - 건강관리·재활훈련·사회참여 분야별 운영으로 자립능력 향상, 사회참여 활성화 도모
 - 일방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아닌, 주민 의견을 공감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로 주민 밀착형 재활서비스 추진



○ 추진체계



□ 추진사항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 기초건강관리

구 분	운영실적	내 용	관련 사진
만성질환 집중관리	3회/7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소견자 만성질환관리 1:1 교육 및 관리 	
건강영양 식이교실	3회/6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영양교육 및 식이교실 - 고혈압 예방을 위한 저염 영양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쌈, 저염식 쌈장 및 여름철 보양 음식 해신탕 만들기 - 당뇨병 예방을 위한 저당 영양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시 라떼, 홍시 티라미수 만들기 	



○ 재활훈련

구 분	운영실적	내 용	관련 사진
재활전문의 상담·자문	1회/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장애인 평가 및 계획수립(사례회의) - 재활운동법 및 일상생활동작관리 교육 - (연 계) 가천대학교 길병원 재활전문의 자문의 위촉 ⇒ 하반기(11월) 지역사회재활협의회 및 사례회의 예정 	
맞춤형 재활 운동교실	186회/ 4,80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운동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맞춤형 매트훈련 · 관절가동범위 증진을 위한 상·하지 운동 - (맞춤형 일상생활동작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치료도구(컵쌓기, ROM아크, 페그보드) 활용 소그룹 소근육 운동, 협응훈련 · 퍼즐, 페그보드 등을 활용한 인지(집중력·기억력 등) 훈련 	
중증 장애인 가정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재활) 77회/30명 · (가옥개선) 10회/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방문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기초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동작관리 교육 - (연 계) 경인권역재활병원,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문적인 치료 대상자 연계 · 주거환경개선 및 재활보조기기(안전바) 등 지원 	

○ 사회참여

구 분	운영실적	내 용	관련 사진
주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힐링터, 옥상텃밭 사업	· (치유정원) 5회/88명 · (한평텃밭) 12회/35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정원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초류 및 꽃 있는 관목류 등 식재 · 치유정원 작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 (한평텃밭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작물(토마토, 가지, 고추 등) 재배 및 수확 · 수확 작물을 활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 우울척도(PHQ-9) 사전·사후 검사 <p>⇒ 주민(장애인) 참여형 모임 조직화 기반 구축</p>	
장애인 가족지지 프로그램	· (재활교실) 14회/103명 · (자조모임) 4회/5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그룹 재활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트로트 건강체조, 소근육 발달 신문지 접기) · 인지활동(압화를 이용한 텀블러·책갈피 만들기) · 신규장애인 대상 정서지원 프로그램(원예치료) -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인지활동을 통한 참여자 간 동료 상담 · 삶의 만족도 사전·사후 검사 - (연 계) 인천가톨릭대학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발생예방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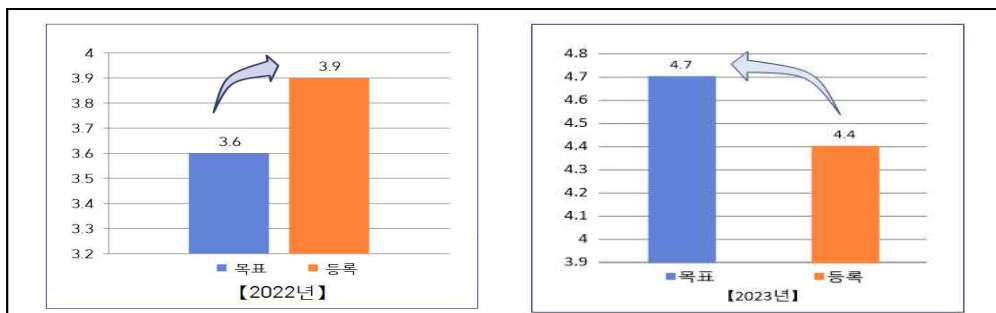
구 분	운영실적	내 용	관련 사진
장애발생 예방교육	8회/18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사고로 장애를 가진 강사 사고 사례 소개 - 손상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생활주변 사고발생 동영상 시청 및 예방법 교육 - 뇌와 척수 등 신체의 중요성 인식 등 - (연 계) 국립재활원 	
사고예방 재활운동 교실	4회/7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요통·어깨통증 예방 운동법 및 바른자세교육 - 1:1 실습 및 상담 등 - (연 계) 경인권역재활병원 	

[지역사회 내·외부 자원 협력]

내부 자원	외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고지혈증) : 2회 49명 - 연계 사업 : 감염병관리사업 - 연계 인력 : 2명 (임상병리사 1, 간호사 1) - 연계 방법 : 만성질환 유소견자 만성질환 클리닉 연계 및 PHIS 등록 건강상담 - 만성질환클리닉 연계 : 3회 72명 - 연계 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 연계 방법 :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예방을 위한 식사요법 1:1 지도 및 상담 - 재활건강영양식이교실 : 3회 60명 - 연계 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 연계 방법 : 만성질환자 및 유소견자 대상자별 맞춤 식이지도 및 영양교실 운영 - 옥상텃밭사업 : 17회 440명 - 연계 사업 : 주민참여지원사업 - 연계 방법 : 지역주민 대상 치유정원교실 및 한평텃밭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인권역재활병원 -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및 방문재활 : 16회 2명 (재활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인력 지원) - 사고예방 재활운동교실 교육: 4회 75명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지원 및 상담 : 10회 10명 -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인하대병원) : 2회 2명 - 진료, 건강검진, 주치의 등 의료서비스 연계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8회 189명 『장애발생예방』교육 운영 시 장애인 강사지원 - 인천가톨릭대학교연계, 소그룹재활교실 : 14회 103명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간담회 실시 : 1회 - 참여자: 길병원 재활의학과교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담당자 등 5명

□ 사업효과

-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 선정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우수기관 ‘우수상’ 선정
- 건강보건관리서비스를 건강관리·재활훈련·주민참여·정서지원 분야별 구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개선
- 건강문제와 재활 요구도를 파악, 사전·사후 평가 등 모니터링 및 환류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 신규 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로 재가 장애인 서비스 수혜율 달성 4.4%↑(연간 목표 4.7 %) ➡ 등록 관리율 연차별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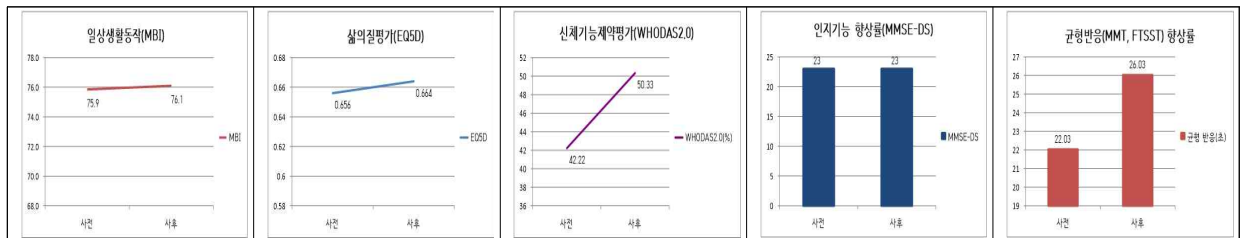


※ 2023년 연간 목표 4.7% 대비 94.4%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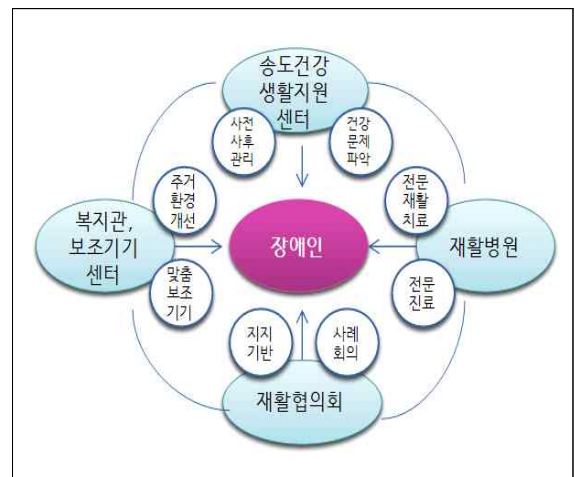
- 기초건강관리 평가결과(검사대상: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20명)
 - 기초건강 검사항목(혈압, 혈당, LDL) 전체 수치 감소↓

구분	혈압 (정상수치: 120/80미만)		혈당 (정상수치: 공복100 / 식후140미만)		LDL (정상수치: 100미만)
	수축기	이완기	공복	식후	
사전검사	127	71	공복 104	135	87
사후검사	124	69	공복 101	100	81
차이	-3mmHg	-2mmHg	공복 -3mg/dl 식후 -35mg/dl		-6mg/dl

- 재활훈련 평가결과(검사대상: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 20명)
 -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동작(MBI) 평가 70% 향상↑
삶의 질(EQ_5D) 평가 55% 향상↑



-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특화차량 활용, 중증 장애인 방문재활 사업 확대 추진 (22년 20명 → 23년 45명)으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형평성 제공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으로 질적·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신규 추진) 길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1:1 장애인 진료 및 상담 실시



- 『주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힐링터, 옥상텃밭사업』 주체적 참여로 사후우울 (PHQ-9)척도 감소 : 4.05점 → 3.11점
- 장애인과 주민이 직접 작물을 재배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참여 공간 마련

▶ 주민 참여형 모임 조직화 기반 구축



옥상텃밭 조성



단체 사진

□ 관련 보도자료



재가방문재활 서비스

2023년 3월 8일 수요일 003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재가장애인
의 사회적응 중심을 위한 커뮤니티

민간의 의견과 반영돼 재가장애인
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커피메이
킹교실 운영을 계획한데다가 요가교실
을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
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연구 등록을 희망하거나 프
로젝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연
수구 등록 장애인들은 송도강서생
원센터 재활홍보실 ☎(032-704-
6927~9)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장
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
고해 손상된 신체 기능 회복과 정
서적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연수구청장 인사 ksq@naerwco.kr

구분 소득 건강생활지표

인천시 연수구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일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옥상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힐링터, 옥상텃밭' 한 평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옥상텃밭 시범사업 결과 옥상텃밭 프로그램 참여자는 우울척도(PHQ-9)를 비교했을 때 참여 전보다 참여 뒤에 우울감 정상군 숫자가 31.6% 증가했다.

이 같은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이상넷발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 참여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주변이 참여하고 가꾸는 힐링터. 옥상텃밭 한 평 텃밭 프로그램은 3㎡ 크기의 한 평 텃밭 15곳을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옥상 유휴공간에 조성해 텃밭 관리와 농기구 사용 등 기본교육과 함께 계절작물 재배에서 수확까지를 교육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상반기 총 12주간 ▶작물(토마토, 고추, 가지, 쌀 채소 등) 재배 ▶재배 작물 수확
과 만들기 프로그램 ▶작물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우울척도 사전 사후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이 수확한 계절작물을 지역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나눔행사와 직접 일군 한 평 텃밭교실 사진을 전시하는 우영 사진 전시회 개최도 준비한다.

10일부터는 장애인, 치매 가족 등 연구주 주민 4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송도 건강생활지
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032-749-6922)로 참여가 가능하다.

건강상태 개선 재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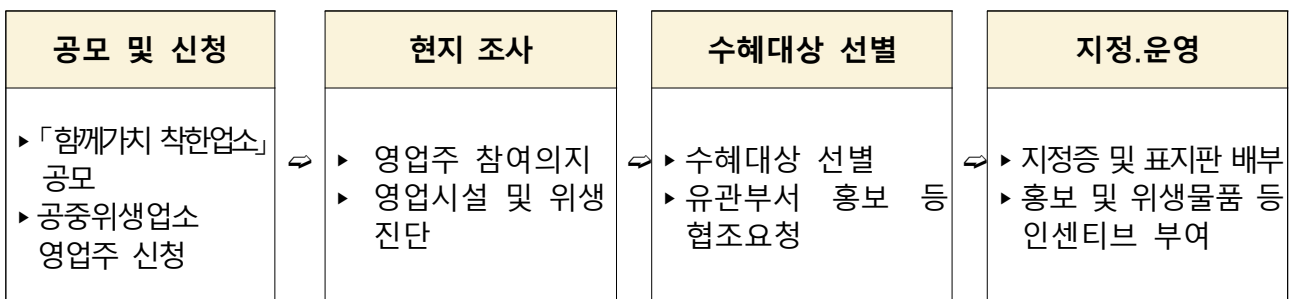
수범사례 8 이·미용업소 & 목욕장업소 대상 「함께가치 착한업소」 운영

□ 추진배경(목적)

- 사회소외계층 대상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자발적 혜택 제공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기여
- 경영 침체된 공중위생업소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이·미용업소 & 목욕장업소
- 수혜대상
 - 만 70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내 청소년
- 운영방법
 - 영업주 업소 이용 요금 자율적 할인 및 무료혜택 등 제공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 이상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 무료 이용)
 - 대한미용사회 연수구지회 및 대한목욕업중앙회 인천시지회 등 협조를 통해 업소 참여 독려
 - 구정 소식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지속적 사업 홍보
-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지정·운영 절차



□ 추진사항

- 함께가치 착한업소 운영을 위한 유관 협회 자문 및 협조 요청
- 22년도 홍보 및 참여업소 모집 : 15개소 (목욕장업3, 이용업1, 미용업11)
- 23년도 신규 신청업소 : 5개소 (이용업1, 미용업4)
- 착한업소 신청 사전 위생 컨설팅 시행 : 유관 협회 협조로 전수 적합
- 함께가치 착한업소 지정 현판 게시, 만족도·현황 조사, 인센티브 제공

□ 사업효과

- 2022년 함께가치 착한업소 지정·운영을 통한 수혜자 1,268명 발굴
- 사업평가 시행 결과 참여업소 80% 이상 사회 기여도 및 영업 활성화 관련 사업지속 참여 의지에 대한 긍정적 답변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

□ 관련사진

시대일보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005면 인천
연수구, 공중위생업소 착한 업소 모집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에서는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를 대상으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가치 착한 업소'를 모집한다. '함께 가치 착한 업소'는 어르신·저소득층·한부모가족 내 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활인 및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업소를 말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영업 시설 및 위생 관련 맞춤형 컨설팅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지정증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지정 표지판 ▲위생 물품 제공 및 구정 소식지 홍보 등 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다"며 "업소 선정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낙경기자 nklim@sidaeilbo.co.kr

2022년 이·미용 목욕장업 [함께가치착한업소]

Yeosu 2022년 이·미용 & 목욕장업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운영

이웃을 대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싶은 이·미용·목욕장업 영업주 여러분! 함께가치 착한 업소로 지정되면 구정 소식지, 위생 물품,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업종명	업종	주소	지정인원	신청인원	비고
1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호	2인원	2인원	834-7772
2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2호	2인원	2인원	710-5700
3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3호	2인원	2인원	070-7662-8000
4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4호	2인원	2인원	749-7660
5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5호	20%	20%	811-5554
6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6호	10%	10%	821-3332
7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7호	10%	10%	815-6627
8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8호	20%	20%	817-7049
9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9호	10%	10%	818-0079
10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0호	10%	10%	832-3663
11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1호	20%	20%	821-5229
12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2호	30%	30%	819-7838
13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3호	30%	30%	822-5718
14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4호	30%	30%	815-5341
15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5호	5%	5%	834-2213

신청장소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문의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행정관리팀 (☎749-7961-3)

보도자료 제공

2022년 이·미용 목욕장업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운영

구는 관내 공중위생업소(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를 대상으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가치 착한 업소'를 모집한다. '함께 가치 착한 업소'는 어르신·저소득층·한부모가족 내 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활인 및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는 업소를 말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함께 가치 착한 업소'는 현재 15개 업소를 운영 중이다. '함께 가치 착한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영업 시설 및 위생 관련 맞춤형 컨설팅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지정증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지정 표지판 ▲위생 물품 제공 및 구정 소식지 홍보 등 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업소에서 평소 할인 혜택을 받아 하시는 손님중 지원은 가능하다. '함께 가치 착한 업소' 선정은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생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연수구 함께 가치 착한 업소

구분	업종명	업종	주소	지정인원	신청인원	비고
1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호	2인원	2인원	834-7772
2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2호	2인원	2인원	710-5700
3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3호	2인원	2인원	070-7662-8000
4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4호	2인원	2인원	749-7660
5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5호	20%	20%	811-5554
6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6호	10%	10%	821-3332
7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7호	10%	10%	815-6627
8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8호	20%	20%	817-7049
9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9호	10%	10%	818-0079
10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0호	10%	10%	832-3663
11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1호	20%	20%	821-5229
12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2호	30%	30%	819-7838
13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3호	30%	30%	822-5718
14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4호	30%	30%	815-5341
15	미용업	미용업	연수구 연수동 34-1 지점 15호	5%	5%	834-2213

※ 업소 선정은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함

SNS 카드뉴스 홍보

구정 소식지 게재

참여업소 지정 현판 게시

수범사례 9 기억울타리 치매안심마을 조성

□ 추진배경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2020. 8월 ~ 지속
- 대 상: 선학동(2019 조성), 청학동, 연수2·3동, 동춘2·3동, 옥련1동
- 내 용: 주민 주도형, 치매 친화적 안심마을 운영

- | | |
|-----------------|---------------------|
| ① 지역사회 자원 조사 | ⑤ 치매안심공원 조성 |
|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⑥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개최 |
| ③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⑦ 기 조성 치매안심마을 운영·관리 |
| ④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 |

□ 추진사항

- 치매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지정 연도	2020	2021		2022		2023
대 상	청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동춘3동	옥련1동

-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분	청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동춘3동	옥련1동
인 원	13명	13명	13명	12명	12명	12명
회의 운영	3회	3회	3회	4회	4회	4회

○ 치매안심가맹점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운영 : 290개소

- 영업주 및 직원 대상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파트너 등록
- 치매안심가맹점·치매극복선도단체 스티커 또는 현판 부착
- 치매 관련 책자 및 리플릿 등 정보지 비치

○ 치매안심공원 조성 : 7개소

연번	치매안심마을	공 원 명	제작 · 설치물
1	선학동	선학공원	· 치매예방 입간판(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예방수칙 3.3.3.) · 정자 내 치매예방체조 배너 · 산책로 치매예방 홍보 페인팅
2	청학동	하나공원	· 공원녹지와 주관 실버행복공원 조성 예정(23년 11월) · 치매예방 관련 자료 제공 등 자문 협조
3	연수2동	솔안공원	· 치매예방 입간판(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산책로 치매예방 홍보 페인팅
4	연수3동	연일공원	· 치매예방 입간판(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예방수칙 3.3.3,) · 산책로 치매예방 홍보 페인팅
5	동춘2동	풍림공원	· 치매예방 입간판(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기억력을 키우는 짝 맞추기) · 치매예방 조형물(치매파트너 포토존, 기억누리길 간판) · 정자 내 치매예방체조 배너 · 산책로 치매예방 홍보 페인팅
6	동춘3동	부수지공원	· 치매예방 입간판(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예방수칙 3.3.3, 기억력을 키우는 짝 맞추기) · 치매예방 조형물(치매파트너 포토존, 기억누리길 간판) · 정자 내 치매예방체조 배너 · 산책로 치매예방 홍보 페인팅
7	옥련1동	능허대공원	· 치매예방 입간판(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예방수칙 3.3.3, 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기억력을 키우는 짝 맞추기) · 치매예방 조형물(치매파트너 포토존, 기억누리길 간판) · 정자 내 치매예방체조 배너 · 산책로 치매예방 홍보 페인팅

○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개최

구 분	청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2동	동춘3동	옥련1동
일 시	20. 12. 21.	21.12.14.	21.12.15.	22.10.19.	22.10.20.	23.10.12.
장 소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풍림공원	부수지공원	능허대공원
내 용	치매안심마을 사업취지 및 경과보고, 치매안심마을 선포, 기념촬영 등					

□ 수범사항

-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생단체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정보공유로 지역 특성에 맞는 치매친화사업 전개
- 치매안심가맹점·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해 다양한 사회주체 동참 유도
 - 다양한 사회 주체를 동참시켜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여 치매안전망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활동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공원 내 치매예방 안내판을 설치하여 치매 정보 접근성 향상
 - 치매안심마을 내 이용주민이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치매 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치매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도모
- 주민과 함께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여 치매친화적 문화 확산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의 상징적 자리를 마련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 확산

□ 관련사진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치매안심공원 조성



치매안심마을 선포식 및 치매안심공원 제막식



☐ 추진배경(목적)

- 20년 이상 노후된 안골마을 주택 비율이 90% 이상으로 생활환경 및 미관 저해 발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주민 발생
-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집수리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 경관개선 및 거주 주민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5. ~ 2023. 7.
- 총사업비 : 1,900백만원(주택 200호)
- 집수리 지원보조 대상 : 준공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 집수리 내용 : 도장, 방수, 지붕교체 등 외부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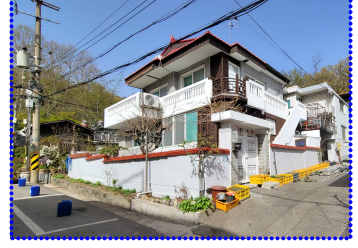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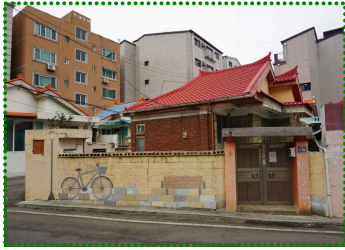
☐ 추진사항

- 23년 말 기준, 총 122호 집수리 지원(하반기 78호 추진중)

☐ 사업효과

- 노후 주택의 집수리를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 마을의 이미지 향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도 상승
- 주택 집수리를 통해 마을의 외관 개선

☐ 관련사진



□ 추진배경(목적)

○ 생활터 방역환경 조성

- 74%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터 방역 사각지대 발굴·개선 및 일상 속 안전한 방역환경 조성 필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로서 관계법령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가 자체 또는 위탁 운영·관리하여 방역사각지대 발생가능

○ 커뮤니티시설 방역지침 부재

-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은 체육시설, 휴게음식점, 목욕장, 독서실 등 종류가 다양하고 운영 방식이 상이함에도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이 없어 분야별로 유사 시설의 기준을 각각 준용함에 따라 통합적·체계적 관리에 어려움 호소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APT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한 80개 단지, 18종, 552개 시설
(신청 단지 대상으로 *우선기준에 부합한 단지 선정)

*우선기준: 1. 임대위 의결, 자치운영 및 500세대 이상, 실내체육시설 2종 이상 등

○ 사업내용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모집·선정
- ‘연수구 APT 커뮤니티시설 생활방역 가이드라인’ 설정 및 배포·교육
-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커뮤니티시설 방역관리 및 환경검사(ATP측정 및 수질검사)
- 방역물품 지원
- 입주민 대상 감염병예방 교육(체험형) 및 캠페인 홍보 실시

□ 추진사항

○ 2022년

- APT 커뮤니티시설 생활방역 전수조사('22. 6.~7월)
- APT 커뮤니티시설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22. 8.~9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시범운영 4개 단지, 43개 시설 선정('22. 9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1차 방역점검('22. 9.~10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중간점검('22. 10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2차 방역점검 및 만족도조사('22. 12월)

○ 2023년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8개 단지, 72개 시설 선정('23. 2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현판 제막식 진행('23. 3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1차 방역점검('23. 3~4월)
- 입주민 대상 ‘올바른 손씻기 체험 교실’ 운영('23. 4~5월)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중간점검('23. 5월)
- 방역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22. 5. 30.)
- 커뮤니티시설 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진행('23. 6. 30.)

□ 우수·수범사례

-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수범사례’ 선정(중앙방역대책본부, 2022.9.14.)
- ‘22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장려상 수상(질병관리청, 2022.12.6.)
- ‘23년 연수구 1분기 민·관 협업 우수사례 선정

[illegible]

□ 기대효과

-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사업 참여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아파트 단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방역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
- 전 세대가 평시 일정수준 이상의 방역 생활화를 통한 신종·대규모 감염병에 안심할 수 있는 건강생활 환경조성

□ 관련사진



▲가이드라인 및 방역교육



▲커뮤니티시설 안심아파트 제막행사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실



▲방역관리자 역량강화교육



▲감염병예방 홍보부스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